政治文化的 觀點에서 본 北韓體制特性과 變化可能性*

金 英 秀

목 차

Ⅰ. 序 論 Ⅱ. 北韓 政治文化의 形成過程
Ⅲ. 北韓 政治文化의 特性 分析, 傳統의 持續과 變動
Ⅳ. 政治文化的 觀點에서 본 北韓의 變化可能性

Ⅰ. 序 論

이 논문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정치문화적 관점에서 북한체제의 特性을 규명해 보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북한 정치체제의 특성에 기초하여 북한체제의 變化可能性을 예측해 보는 것이다.

공산주의체제 국가들을 문화적 관점에서 보면, 매스미디어나 교육제도를 계획적으로 활용하여 「文化體系」의 구조전환을 시도해 온 역사적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즉, 국가의 공식적인 통치이데올로기를 선전 내지는 교화함으로써 정치적 행동에 대한 기존의 定向(orientation)을 변화시키거나 새로운 정향을 창출하려는 「政治文化」의 개조작업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음을 소련, 중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공산주의체제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는

* 이 연구는 1992년도 교육부 지역연구지원금으로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가 주관하여 이루어진 것임.

혁명에 성공하거나 착수한 새로운 정치세력들이 기존의 정치문화를 변형시키지 않고서는 지배관계를 안정시킬 수 없었는 데 주원인이 있다.

소련의 후원을 받으면서 체제의 기반을 마련한 北韓의 경우도 새로운 체제의 정통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傳統文化와의 단절을 시도하고 기존의 정치의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 하는 이른바 「정치문화개조」의 필요성에 처함에 있어서 예외는 아니었다. 이에 따라 북한의 통치엘리뜨들은 사회주의체제를 수립하면서 인민들로 하여금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를 신념화하고 당과 국가 그리고 지도자에 대한 충성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인민의 재사회화 내지는 사상교육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왔으며, 무엇보다도 새로운 사회주의체제에 적합한 「새로운 사회주의적 인간」을 주조하기 위해 전통적인 제도 및 가치관에 기초한 사회구조기반과 의식을 약화시키거나 무력화시키는 데 가장 큰 비중을 두어왔다.

그 결과, 북한은 1972년 10월 21일 『로동신문』 사설에 "주체사상이 봉건윤리에 기초한 전통적 정치문화에 대신하여 새로운 정치문화로 등장"했음을 발표함으로써, 이미 1970년대 초에 주체사상에 기초한 새로운 정치문화를 창출시켜 형성해 가고 있음을 공표하고 있다. 즉, 새로운 사회주의체제에 맞는 새로운 사회주의 문화를 형성하려던 북한 지도층의 집요한 결과, 마침내 국가권력유지 메카니즘으로서, 그리고 정치체제 작동원리로서 主體思想에 입각한 政治文化가 형성되기 시작했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과연 傳統의 단절을 시도한 북한 정치체제의 의도대로 기존의 문화적 영향력이 약화되거나 소멸되어 버리고 말았는가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文化」란 짧은 기간 동안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서 인간의 경험과 지혜를 토대로 축적된 것이며, 사회구성원들이 학습에 의하여 그 사회에서 습득한 생활방식 및 사고방식의 총체이기 때문이다.[1] 그리고 사회구성원들의 심리적, 행동적 특

성으로 내면화된 「문화」는 가정과 사회관계에 의해 이루어지고 새 세대의 사회화 과정을 통해 전승되기 때문에 어떤 강압적인 방법으로 강요하거나 변혁을 시도한다고 해서 일시에 변질되거나 쉽게 없어지지 않는 것이 「文化」의 중요한 특성이다. 따라서 한 나라의 정치체제는 짧은 시일내에 변화가 가능하더라도 오랜 세월을 두고 형성된 문화체계는 단시일내에 변화되기가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새로운 정치문화가 형성되는 동안 기존의 전통문화는 북한 정치체제내에서 어떤 變化를 보여 왔는가? 즉, 새로운 정치체제 및 정치문화의 형성과정에서 문화의 持續性은 어떤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는가? 또한 북한 정치엘리뜨들이 전통정치문화의 지속력을 통치에 活用한 측면은 없는가? 그리고 북한 정치문화의 특성에 비추어 북한체제의 변화의 폭을 어떻게 가늠해 볼 수 있는가?

이런 문제들이 이 연구의 주요 관심사항이며 이에 대한 답을 구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 논문의 주요 내용이다. 이를 위해 우선 북한 정치문화가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형성되었는가를 보기로 한다.

II. 北韓 政治文化의 形成過程

북한의 정치문화가 북한이 처한 특이한 환경 여건에서 생성된 정치문화라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의 국가통치이데올로기인 主體思想[2]에 의한 政治文化가 어떤 過程을 거치면서 형성되었는가를 우선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

1) 레슬리 A. 화이트, 『문화의 개념』, 이문웅 역 (서울: 일지사, 1977), 제1부 참조.
2) 1992년 4월 9일 개정된 북한의 사회주의헌법 제3조에서 북한의 공식적인 통치이데올로기는 주체사상임을 명시하고 있다.

주체사상에 의한 정치문화가 형성되기까지의 과정을 크게 3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 단계는 북한 사회성원들사이에 國家建設의 개념이 인식되고 교육되는 1945년부터 한국전쟁이 끝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이른바 새로운 가치문화의 기준으로 등장한 「唯物史觀」이 마치 인류역사의 절대적인 발전방향이나 진리로서 전파되었고,[3] 이 과정에서 文化構造는 일반적인 문화형성 유형과 같은 자연발생적이고 장기적인 생성이 아니라 意圖的인 수립계획에 의해 短期的으로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는 새로 수립되기 시작한 黨性, 人民性, 階級性을 강조하는 문화체계가 북한 주민들에게 하나의 절대적인 가치체계로서 강조되었으나 당시 대부분의 북한 사회성원들이 以前의 전통과 관습에 집착함으로써 새로운 문화체계가 북한 주민들에게 충분히 수용될 상황은 아니었다. 따라서 일제시대의 조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내면적으로 두 개의 문화구조에서 오는 갈등을 겪으면서 점차 외적인 상황의 강력한 흐름에 추종될 수밖에 없는 위치에 놓여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단계는 전후복구 3개년계획과 사회주의적 공업화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5개년 경제계획이 실시된 1954년부터 1960년까지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 기간에 북한 정치엘리뜨들은 農業의 集團化 및 모든 私的 商工業의 國有化政策에 따른 급진적인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하는 정치문화를 창출하기 위해 大衆政治敎育計劃을 추진하였는데, 이 계획의 기본과제는 새로운 사회주의 사회에 합치되는 「社會主義的 人間型」을 주조하는 일이었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사회주의체제에 적합한 「집단주의 정신」의 함양이 공산주의 교양에서 가장 중요시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集團主義 文化라는 문화구조가 북한사회에 서서히 정착되기 시작했다. 예컨대, 「천리마

3) 김영수, "북한 역사관에 나타난 유물론: 정통성 확립을 위한 「역사 국유화」과정을 중심으로," 「동아연구」, 제24집 (1992, 6), pp.163-166.

운동」과 같은 생산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일차적 목적을 둔 集團主義的 노력경쟁운동이 새로운 체제가 요구하는 공산주의적 인간형을 주조하는 인간개조사업의 일환으로서 적극 활용되었다.

국내외의 절박한 환경 속에서 「주체」의 개념이 제기되기 시작한 것도 바로 이 기간이다. 1956년부터 「주체」를 인식시키는 교육은 국내의 권력다툼 속에서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고 권력을 집중화하려는 必要性에서 전국에 걸쳐 실시되기 시작했으며, 1956년 8월 종파사건 이후에는 「항일혁명전통」과 관련된 共産主義 敎養事業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항일혁명전통과 관련된 교양교육이 강조된 이유는 김일성과 그의 빨찌산 동료들이 조선독립운동사에서 가장 활동적이고 중요한 그룹이었다는 사실을 북한 사람들에게 인식시켜 항일빨찌산 출신으로 이루어진 통치체제의 正統性을 창출하는 데 있었다. 이에 따라 1958년에 김일성의 항일혁명전통이 강조된 리나영의 「조선민족해방투쟁사」가 발간되었으며, 1959년부터는 항일무장투쟁 참가자들이 엮는 「항일빨찌산 참가자들의 회상기」등 많은 항일무장투쟁 관련 저술이 발간되었다. 그 결과 항일무장투쟁에 참가했던 지도자들은 인민들로부터 존경의 대상이 되었으며, 모든 교육에서 항일유격전통이 강조되기 시작했으며, 이후 주체사상이 체계화되는 동안 항일유격전통은 주체사상이 내재화된 정치문화의 神話體系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게 되었다.

셋째 단계는 主體思想에 입각한 공산주의 이념교육이 전국에 걸쳐 시행된 1960년 이후 1970년대 초반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 기간은 북한이 김일성의 개인숭배와 우상화, 주체사상의 체계화, 그리고 자주노선의 확립과 관련된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주체사상에 부합되는 새로운 文化體系를 본격적으로 형성하려고 노력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의 특징은 1950년대 후반부터 강조하기 시작한 천리마운동, 천리마작업반운동과 같은 대중정치활동의 핵심인 「대중로선」방식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한 社會改造 및 政治文化 形成作業이었다. 1960년대 초반의 「청산리 정신과 방법」으로 시작된 대중노선은 1970년대 초 思想, 技術, 文化의 「3대 혁명」을 제시하면서 더 한층 체계화되었는데, 「3대 혁명」을 통한 대중동원정치의 목적은 기술혁명을 도입하여 사회를 재건하며 사상혁명과 문화혁명을 통해 통치방법과 그와 관련된 가치의 근본적 변화를 일으키는 데 있었다. 즉, 技術革命을 통해 근대화를 위한 물적 자원를 축적하며, 社會化過程을 활용한 思想革命을 통해 주체사상에 입각한 정치문화를 창출하고, 文化革命을 통해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관습, 태도, 신념, 행동양식을 철저히 改造하려는 데 목적이 있었다.

이러한 과정을 살펴볼 때, 북한의 정치문화에는 첫째, 북한정권 수립 이전의 傳統의 영향이 잠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둘째, 북한정권 수립 이후의 歷史가 반영되어 있으며, 셋째, 북한 통치엘리뜨들의 統治哲學이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현재의 북한 정치문화가 주체사상에 의해 지배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마르크스-레닌주의라는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적 요소 뿐만 아니라 북한의 역사적, 문화적 요인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Ⅲ. 北韓 政治文化의 特性分析: 傳統의 持續과 變動

1. 傳統政治文化의 特性分析

전통적인 정치문화는 儒敎的 정치체계를 유지한 朝鮮朝 시기에 주로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유교적 정치체계에 의하면 정부는 하늘의 뜻에 의해 주어진 最高善의 반영이었다. 또한 훌륭한 정부는 엘리뜨와 대중사

이에 조화로운 관계를 보장하며 倫理的인 人間關係에 기초하여 다스리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따라서 형벌에 의한 지배나 독재적 전단에 의한 지배와 다름없는 法治는 결코 정치의 바람직한 목표가 되지 못하였다.[4] 대신 지배자와 피지배자 모두 천지만물의 진행에 대한 도덕적 표현인 「理」에 따라 행동할 때 조화가 잘 이루어진다고 생각했다.

이런 원리에 입각한 조선조 정치체제는 귀족(양반), 중간계층(중인), 평민(상인), 하층민(천인)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 계층 위에서 운용되었다. 이런 身分關係는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관계를 정당화하였으며, 계층사이에는 높은 차별의식과 사회적 거리감이 존재하면서 계층간의 변동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았다.

따라서 백성들은 정치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으며 참여하지도 않았다. 그들은 단지 受動的 服從者로서 국가권위가 요망하는대로 행동하였다. 정부정책은 백성들이 변화를 시도하거나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받아들이고 복종해야 하는 그런 것이었다.[5] 한마디로 조선조의 정치체계는 鄕里·臣民(parochial-subject) 混合型의 政治文化[6]를 발생시킬 수

---

4) Pyong-Choon Hahm, *The Korean Political Tradition and Law: Essays in Korean Law and Legal History* (Seoul: Hallym, 1967), p.15.

5) Lee Young-Ho, "The Politics of Democratic Experiment, 1948-1974," in Edward R. Wright (ed.), *Korean Politics in Transition* (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1975), p.17.

6) 鄕里型 政治文化의 특징은 우선 정치적·경제적·종교적 기능간에 역할의 구별이 뚜렷하지 않다는 점이다. 즉, 전문화된 정치적 역할이 없어 개인은 정치에 대한 관심이 없고 또 정치체계에 대한 아무런 기대도 가지지 않는다. 또 이러한 정치문화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국가 전체에 대한 충성의식이나 전국적인 수준의 국민적 연대의식이나 일체감보다는 종족집단이나 개인이 소속하고 있는 一次集團에 대해 더 강한 애착을 보이는 특성을 나타낸다.
한편, 臣民型 政治文化의 특징은 분화된 정치체계와 그 산출의 측면에 대한 정향의 강도는 높으나, 투입대상과 활동적인 참여자로서의 자신에 대한 정향의 강도는 매우 낮다는 점이다. 즉, 개인들은 정치체계가 다른 사회·경제 및 종교기능과 구분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인식은 하지만, 주로 정치체계의 産出的 측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뿐 投入機能에 대한 정향감각은 거의 없고 또 자신을 정치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자로 생각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개인은 정부가 하는 일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조선조의 정치정향은 ① 세습적 절대권력을 행사하는 王, ② 사농공상의 엄격한 신분구조를 바탕으로 막대한 정치권력을 소유한 소수 양반관료들의 中央執權制, ③ 이들의 위치를 보장해주는 이데올로기로서의 儒敎, ④ 양반관료와 평민사이에 오랜기간 형성되고 이어져온 행동 등에서 산출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조선조의 政治文化는 정치적으로는 양반관료가 지배하는 君主制 社會, 경제적으로는 농업중심의 封建制 社會, 사회적으로는 가족주의적 身分制 社會, 그리고 문화적으로는 儒敎倫理에 의해 특징지어지는 사회에서 형성되었던 것이다.

이런 배경에서 형성된 朝鮮朝 政治文化의 特性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倫理的 權威主義를 들 수 있다. 여기서의 「윤리적 권위주의」란 백성의 국가에 대한 충성이나 복종을 당연시하고 이를 윤리의 문제로서 다루는 것을 의미한다. 유교윤리의 특성상 유교사회의 인간관계가 어떤 반대급부와 밀접히 관련되지 않고 오로지 恩惠關係나 上下의 敬愛的 機能關係로서 이루어지며 이러한 관계가 사회생활의 모든 영역에 그대로 적용되어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 물론 이러한 권위주의는 군주·부모·스승·손위 사람의 倫理的 優越性을 전제로 하며, 이들의 아랫 사람에 대한 人本主義를 또 하나의 禮로서 강조한다.

그런데 이러한 윤리적 권위주의는 조선조 후기에 들어서면서 官人中心

에는 관심이 있지만 자기 의사나 이익을 정부에 투입시켜 정부로 하여금 자기 의사를 반영하도록 하는 일에는 관심이 거의 없다. 이러한 정치문화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정치체계의 권위를 철저히 인식하고 있고 또 여기에 복종하려는 경향도 강하기 때문에서 개인이 정치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인식은 본질적으로 피동적일 수밖에 없다. Gabriel A. Almond and Sidney Verba, *The Civic Culture : Political Attitudes and Democracy in Five Nation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3), pp.16-19.

의 윤리적 권위주의정치가 變貌되면서 정치·행정의 불안정과 혼란을 초래하게 되며,[7] 일제의 식민통치하에서는 한국의 전통적 권위주의에서 윤리성을 박탈함으로써 권위주의적 전통을 결정적으로 왜곡하고 변질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8]

둘째, 「家」中心的인 정향에서 산출된 「擬人主義」(personalism)를 들 수 있다. 무엇보다도 孝를 중시하며 가정이나 가족의 관념을 사회·국가의 관념보다 우위에 놓고 또 대가족제도를 강조하는 유교윤리는 「家」중심적 정향을 낳았는데, 이러한 정향은 여러 형태의 「家」중심적 정치문화를 산출시키는데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서 「擬人主義」 성향을 들 수 있는데, 이는 개인간이나 집단관계에 있어서 혈연이나 사적인 친소관계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1次的 集團志向을 의미한다. 즉 공식화된 집단이나 결사단체 내에서도 제도보다 사람 혹은 인맥을 중히 여기는 성향을 말한다.

셋째, 「家」중심적 정향에서 산출된 「限定된 共同體意識」을 들 수 있다. 강한 가족중심적인 교육과 생활구조로 인하여 더 넓은 사회에 대한 관심이나 충성심이 발달하지 못하고 오직 가족집단에의 충성으로만 그치고 마는 성향을 뜻한다. 조선사회에서는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유년기의 교육이나 생활구조로 말미암아, 성원 각자가 자기가 소속된 공동체로부터 분화된 생활을 영위하기가 어려웠다. 따라서 가족이나 마을과 같은 좁은 집단을 중심으로 강한 소속감이나 일체감은 강하게 나타난 반면, 공동체 내에서 「나」와 「공동체」를 구분하고자 하는 의식은 약했다. 특히 이 공동체 의식은 「우리 국가」보다는 「우리 사회」, 우리 사회보다는 「우리 집」 즉, 좁은 집단에 역점이 있었다.

---

7) 김운태, 『朝鮮王朝行政史 (近世篇)』, (全訂版; 서울: 박영사, 1981), pp.359-75, 385-414 참조.

8) 김운태, "韓國政治의 狀況的 條件과 歷史文化的 脈絡," 김운태 외, 『韓 國政治論』 (第二全訂版; 서울: 박영사, 1989), p.205.

이러한 한정된 공동체 지향의식은 오랫동안 외적의 침입으로 인하여 결국은 국가도 나를 확실하게 보호해 주지 못하며 오직 확실하게 나를 보호해 주는 것은 「핏줄」로 이어진 가족집단뿐이라는 민족의 역사가 가져온 필연적인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9] 그리고 두레라든가 품앗이, 마을의 자치규약인 鄕約 등이 소집단을 단위로 한 공동체의식의 제도화란 점에서 조선사회의 공동체문화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알 수 있다.

넷째, 민족적 주체의식의 전통을 들 수 있다. 민족의 주체의식은 우월한 중국문화에 흡수되거나 동화되지 않고 민족고유의 문화와 언어의 독자성을 견지해 오면서, 빈번한 외침에도 불구하고 민족적 통합성을 보전해 온 역사에 잘 나타나 있다. 이러한 민족의 주체의식은 역사적 상황에 따라 抵抗意識으로 또는 恩惠(共存)意識으로 표출되었는데, 저항의식은 외세로 인해 민족의 주체성과 자주성이 제약되는 부정적 상황에서 나타났고, 은혜(공존)의식은 외세가 민족이 지키려는 주체성과 자주를 승인하거나 지지해 주는 긍정적 상황에서 나타났다.

그러나 유교교육으로 사회화된 兩班으로 불리우는 소수지식계층의 대부분은 국가나 민족에 대한 애착심보다는 家中心 또는 親族中心의 정향을 강하게 나타내어 국가가 위기에 처한 경우에도 민족의식이나 저항의식을 쉽게 발휘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일반 백성들의 민족의식이나 저항의식과는 달리 중국에 의존하려는 사대주의 성향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외세의존적인 事大主義 경향은 朋黨政治의 派閥性 속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다섯째, 중앙집권제의 운영에 따른 정치문화를 들 수 있다. 조선조의 중앙집권제는 정부는 모든 사회조직에 초월하는 주권적 존재이며 국가내의 모든 단체나 조직은 정부의 권력하에 예속되고 규율된다는 一元論的

9) 崔在錫, 『韓國人의 社會的 性格』 (수정 13판; 서울: 개문사, 1989), pp.175-176.

政治理論에 바탕을 두고 운영된 것인데, 이런 제도적 특성으로 말미암아 형성된 것이 정부조직에 충원된 소수양반관료 중심의 官僚主義的 政治文化이다. 그런데 관료주의적 정치문화는 관료들의 「家」중심적 사고방식과 명분을 중요시한 유교원리의 특성으로 인하여 관료들간에 배타적인 경쟁의식이 작용함으로써 상호간의 政治的 不信의 정도가 높은 정치문화를 간직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이기는 자가 모든 것을 차지하게 되는 미분화된 사회구조로 말미암아 정치에 임하는 규칙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 힘든 특성도 지니고 있었다.

또한 정치참여과정에는 소수관료만이 참여하고 일반 백성들에게는 묵종, 순응이 요구됨으로써 백성들의 참여도는 매우 낮을 수 밖에 없었고, 그 결과 정치적 冷笑主義나 심한 경우 폭력을 수반한 저항행위가 유발되기도 했다.

이상의 특성을 볼 때, 조선조의 정치문화는 鄕里型과 臣民型의 특성이 혼합된 정치문화라고 할 수 있고, 전통사회의 특징인 귀속주의에 기초한 신분구조, 미분화된 역할구조, 특수주의적 가치지향, 감정지향의 정실주의 등을[10] 바탕으로 한 정치문화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일본의 식민통치기간은 수 세기의 전통적 지배기간에 비하면 비교적 짧은 기간이었지만 한국사회에 미친 영향은 지대하였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일제통치기간은 한국의 고유한 규범이나 정치적 정향과 정치적 실제가 완전한 相剋을 이루었던 시기였으며, 철저하게 지배와 복종관계만

10) 이러한 전통사회의 특성은 파슨즈(Talcott Parsons)가 전통/근대사회를 구별한 유형변수에서 빌어 온 것이다. 파슨즈의 유형변수는 다음과 같은 兩分法에 기초한다. ① 감정 - 감정중립, ② 자기 지향 - 집단 지향, ③ 특수주의 - 보편주의, ④ 귀속 - 성취, ⑤ 미분화 - 전문성. Talcott Parsons and Edward A. Shils, "Values, Motives, and Systems of Action," in Talcott Parsons and Edward A. Shils (eds.), *Toward a General Theory of Action* (2nd ed.; New York: Harper & Row, 1962), pp.76-81; Talcott Parsons, *Societies: Evolutionary and Comparative Perspectives*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1966), pp.22-23.

이 강요되었던 강권정치[11]의 기간이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35년간의 일본 통치는 조선왕조의 정치적 전통을 잊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을 뿐 아니라 사회구성원들의 의식과 행동에 영향을 남겨주기에 충분한 긴 시간이었다.[12] 그러므로 일제의 영향은 적어도 조선조의 정치문화만큼이나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의 지배는 무엇보다도 한민족의 주체의식 및 민족적 자신감에 큰 영향을 주었으며,[13] 통치자와 피통치자와의 관계가 윤리적 권위주의라는 전통에서 벗어나 비도덕적이며 적대적인 억압자와 피억압자라는 관계로 전환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일본통치가 가져온 또 다른 영향은 政治的 冷笑主義의 만연현상이다. 조선시대에는 유교철학과 경제적 종속성으로 인해 통치는 직접적이 아니라 고을 중심으로 관리를 통하여 간접적 지배를 했으며 이를 백성은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즉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관계는 한정적이고 간접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일제통치자들은 태평양전쟁의 지원 뿐만 아니라 식민정책의 목적달성을 위해 강압적 동원을 실시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 과정에서 조선인들은 외국의 통치자에 의해 처벌당하고 착취당하였다. 이제 지배자는 더 이상 「덕망있고 자

---

11) 고도의 강권과 통제력이 동원되었다는 점에서 그레고리 헨더슨은 일제시대를 가리켜 '식민 전체주의'(colonial totalitarianism)라고 부른다. Gregory Henderson, *Korea: The Politics of the Vortex*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68), p.72.

12) 일제의 식민통치가 한국의 정치문화에 대해 별로 미친 점이 없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예컨대, 이영호는 일제통치가 조선조의 정치전통을 영속화하고 더욱 강화시켰을 뿐이며 아무 것도 더한 것이 없다고 보고 있으며, 그레고리 헨더슨도 한국정치문화에 대한 일본 식민통치의 영향은 전후 미국의 영향과 더불어 전반적으로 무시할 만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영호, 1975, 앞의 글, p.17; Gregory Henderson, 1968, 앞의 책, p.73 참조.

13) 한민족의 주체의식 및 민족적 자긍심을 약화시키거나 파괴시키기 위하여 일본이 행한 조치로는 첫째, 한민족사의 날조 및 왜곡, 둘째, 환멸의식의 조장, 셋째, 근대화의 교란과 위축정책 등을 들 수 있다. 李炫熙, "일제의 조선 통치책과 한국인 의식에 미친 영향," 신용하 외, 『일제 강점기하의 사회와 사상』 (서울: 신원문화사, 1991), pp.146-153.

애로운」 사람이 아니었다.

결국 일제의 식민통치는 조선인들의 자기 이미지와 자존심을 파괴시켜 버렸고 현재의 고통이 과거유산의 결과라고 받아들이도록 재사회화시켰다. 또한 법을 위반하고 지배자에 대해 비판을 하는 것이 애국적인 행동으로 찬양되는 이전 사회에서는 전혀 볼 수 없던 행위유형을 유행시키고 말았다.

일본통치가 준 영향[14]은 앞에서 본 것처럼 민족의 전통유지 측면에서 매우 부정적인 것이었다. 특히 사회구성원의 정치정향에 미친 영향은 전통정치문화의 그것과는 다른 것이었다. 이런 상황하에서 개인의 정치적, 심리적 정향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해 갔는지 3·1운동을 기준으로 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한일합방 직후 이전의 지배계층은 주로 가정에 은둔하며 유교체계를 지키면서 대외적인 활동을 되도록 하지 않음으로써 일본 지배의 부당성에 항거하였다. 그러나 새로운 교육제도에서 新教育을 받기 시작한 젊은 세대는 점차 구권위를 부정하게 되고 외향적인 정향을 나타내기 시작했는데, 레닌의 러시아혁명 성공, 윌슨의 민족자결주의 주창, 중국에서의 학생운동 등은 이들 젊은 학생들에게 커다란 자극제가 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들의 행위를 체계화하고 성숙시킬 능력은 부족했으며 이를 행동화하기에는 유교교리의 영향이 더 강했다. 따라서 二重의 가치태도를 수용하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 즉, 집에서는 유교적인 행동을 하고 밖에서는 집단주의적이며 외향적인 생활을 하는 이원화된 행동유형을 익히지 않으면 안 되었는데, 최초의 집단적인 독립운동인 3·1운동은 낭만적이고 이상주의적인 사고와 행동을 지닌 이들이 주축이 되어 가능할 수 있었다.[15]

---

14) 金雲泰는 일제식민통치가 남긴 政治文化의 遺産으로 ① 民族性의 마비와 民族分裂의 助長, ② 不信否定心理의 造成, ③ 官僚的 權威主義文化 造成, ④ 暴力主義의 因襲, ⑤ 歪曲된 植民史觀의 扶植 등을 들고 있다. 김운태, 1989, 앞의 글, pp.186-191.

독립운동이 실패로 끝나고 난 후, 이에 자극받아 소위 문화정치를 표방한 일본총독부는 다양한 同化政策 및 회유정책을 실행하게 된다. 가장 큰 목표는 구세대와 젊은 세대를 분리하는 정책이었는데, 이를 위해 젊은 층 통제라는 명목하에 이전의 관리나 지주들을 예우하면서 마을을 감독해줄 것을 부탁하는 한편, 지금까지 전통의 말살을 위해 제한했던 조상제사와 양력사용을 내세워 공식적으로 금지했던 음력설 및 추석을 부활시킴으로써, 차츰 일본을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친일파 구세대를 확보하는 데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게 된다. 또한 친일파 일색으로 구성하더라도 일단은 성균관을 재개하고 아울러 이율곡과 이퇴계의 글을 아이들의 교재로 쓰게 하자, 원래 국가중심적이거나 민족중심적이지 않던 과거 엘리뜨 출신들은 일본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남녀공학제도를 실행하지 않는 조건하에서 자식들이 신교육을 받도록 허락하는 전환적 태도를 보이게 된다. 결국 일제는 한국의 구귀족들과 야합하는데 성공을 거두게 된 것이다.

한편, 한국민을 일본인으로 同化시키기 위해서 敎育을 통한 정치사회화에 힘쓰게 되는데, 이는 효율적인 식민행정수행에 이용한다는 목표에도 기인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목표는 교육기관의 확장을 통하여 일본어를 보급시켜 초중등수준의 국민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일제에 충실한 臣民을 양성하는 데 있었다.[16] 이에 따라 식민통치가 중반기에 들어서면서 신사참배가 국민학생과 중등학생에게 의무적으로 강요되었고 한국어의 사용을 금하고 개인의 국가에 대한 충성, 다시 말해 일본천황에 대한 충성을 강요하는 교육이 실시된다. 특히 한글 및 국어사용금지령은 구세대를 사회로부

15) Thomas Hosuck Kang, "Changes in the North Korean Personality From Confucian to Communist," in Jae Kyu Park & Jung Gun Kim (eds.), *The Politics of North Korea* (Seoul: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Kyungnam University, 1979), pp.74-75.

16) 劉奉鎬, "日本植民地政策下의 初·中等學校 敎育過程 變遷에 관한 硏究"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2), p.204.

터 격리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고 신·구세대의 공감대 형성에도 결정적 장애를 가져오게 된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발발 후 강화된 내선일체, 창씨개명, 신사참배, 종군활동권유 등의 일본인화 요구는, 1919년 이후 출생하여 거의 日本人化되다시피 한 조선인들에게 일종의 국민의식(national identity)의 위기를 가져오게 만든다. 즉, 조선의 전통적 가정교육과 일본식 학교교육을 받아 內向的이고 家中心的인 조선식 정향과 다분히 外向的이고 國家中心的인 일본식 정향을 동시에 갖고 있으며, 또한 전통적인 父子關係에서의 역할과 君臣關係에서 부여되는 천황의 충직한 신하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이중적인 정향을 지니고 있던[17] 젊은 세대들에게 일본인화 요구는 그들로 하여금 내적인 딜레마에 빠지게 만들었던 것이다.

이상의 것을 종합해 볼 때, 일본은 조선인의 황국신민화를 위해 두 가지 차원의 정치사회화전략을 수행했다고 볼 수 있다. 식민초기 강압적인 무단통치 일변도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1920년부터는 보다 세련된 동화와 회유정책을 실시한 바 있는데, 여기서 정치사회화전략의 구분이 나타난다. 즉, 舊세대의 同化를 위해서는 그들의 확고부동한 전통적인 신념체계부터 뜯어 고치려는 무리를 범하지 않는 대신, 호감을 살 수 있는 정책을 먼저 실시함으로써 그들의 행위유형부터 유도해 낸 후 점차 정치적 태도 및 정치적 신념체계를 바꾸어 가는 방법을 사용한 반면, 합방을 전후하여 태어난 新세대에게는 통상의 정치사회화과정인 信念體系 주입단계, 政治的 態度 내면화 단계, 政治的 行爲의 표출단계라는 과정을 밟아 同化시키는 전략을 사용했다고 볼 수 있다.

---

17) Thomas Hosuck Kang, "The Changing Nature of Korean Confucian Personality under Japanese Rule," in C.I. Eugene Kim and Doretha E. Mortimore (eds.), *Korea's Response to Japan: the Colonial Period, 1910-1945*' (Kalamazoo: The Center for Korean Studies, Western Michigan University, 1977), Chapter 14, pp.293-315.

그런데 결과는 (전체적으로 일반화시켜 한마디로 단정하는 것은 무리지만) 원래 민족이나 국가의 이익보다 가문의 이익을 먼저 고려하는 성향을 지닌 구세대 회유에는 괄목할만한 효과를 나타내 친일파를 적지 않게 양성한 반면, 한국청년을 자기네들이 바라는 대로 정치사회화하는 데는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18] 이는 국가 위기시에 나타나던 전통적인 저항의식과 주체의식이 일본인화 정책이 강화될수록 함께 가속화되어 나타난 결과라 할 수 있다. 즉, 총독전제정체를 악의 존재로 인식했던 일부 지식층이나 일반 대중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이 내세우는 정책이나 목표를 기피하거나 배격하는 것이 바로 애국적 행동이었으며 그런 행동은 「抗日」이나 「反日」이라는 명분에서 정당화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면 일본통치하에서 나타난 정치문화의 특성은 무엇인가? 이것은 전통정치문화와 어떤 점에서 연관성을 가지고 지속되고 있으며, 어떤 측면이 변용되어 새로운 특성을 띠고 있는가?

가장 먼저 들 수 있는 것은 항일 또는 반일의 성격을 띤 民族主義的 政治文化의 형성이다. 일제점령기의 권위구조의 본질에 비추어 볼 때, 반일적 민족주의 또는 저항민족주의의 대두는 당연한 것이었으며 그것의 확대현상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19]

다음으로는 정치투쟁방식으로서의 暴力志向的 性向을 들 수 있다. 식민정책에 항거하려는 반일주의 성향은 폭력을 수반한 저항행위를 정당화시켜주었을 뿐 아니라 신성화했으며 모든 법을 무시나 멸시의 대상으로 삼았다. 즉, 일종의 권위적인 것에 대한 전면부정의식이 자리잡게 되었다.

---

18) 유봉호, 1982, 앞의 글, p.214.

19) 김한교 교수는 일제하의 정치문화적 특성으로서, ① 민족주의, ② 불신과 소원, ③ 관료적 권위주의, ④ 학생운동주의, ⑤ 폭력, 그리고 ⑥ 파벌주의를 들고 있다. 김한교, "韓國에 있어서 日本植民地統治의 遺産,"「韓國의 傳統과 變遷」(서울: 고대 아세아문제연구소, 1973), pp.35-59.

이러한 심각한 정치적 불신과 경원 또는 소위현상은 정치와 폭력의 밀착을 조장하는 결과를 빚어내면서 일제통치에 저항하는데 있어 暴力은 正當化되었으며 愛國的 행위와 직결되었다. 더구나 일본이 강압과 폭력에 의존한 지배를 강행하면 할수록 어떤 폭력에 의한 것이든 저항행위는 정당성을 인정받았다. 이러한 극한적 투쟁방식은 해방 이후의 정국에까지 계속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한편, 不信과 부정심리의 성향은 한국인사이에서도 형성되고 있었는데, 일반 대중과 지도자 사이, 그리고 일반 대중 내부에서 고조된 상호불신현상은 다름아닌 일제의 민족분열지배정책의 결과였다.[20] 즉, 한국인을 사상범전담경찰의 앞잡이로 대거 기용하여 독립운동가를 적발하고, 민족주의 지도층의 내부분열을 조장하며, 민족주의자를 매수 또는 회유공작으로 친일경향적 타협주의자로 전향시킴으로써 민족의 불신과 반감이 심화되었던 것이다.[21]

또한 官僚的 權威主義를 토대로 한 정치문화의 형성을 지적할 수 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총독전제정치의 권위구조는 권위주의적, 군주적, 엘리뜨 지배적인 전통정치체제형태를 그대로 유지한 채로 운영되었으나, 조선조 「天命德治」 政體의 정통성 내용인 倫理性은 철저히 붕괴되어 이를 바탕으로 했던 조선조의 정치적 관례와 행동양식은 관권에 의한 탄압과 묵종을 수단으로 한 약탈행위로 대체되었다. 즉, 식민시대의 總督專制政治는 군사적-팽창주의적 가치정향을 기반으로 해서 조선을 일본제국의 일부로 흡수하는 데 목표를 두었던 중앙집권적 관료정치체제였을 뿐 아니라, 반대가 허용되지 않는 정치적 진공상태에서 고도의 자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명령(칙령)과 포고에 의한 통치형태였다. 그 밖에도 형식적 법규만능주의, 특별권력관계이론[22] 그리고 관존민비사상[23] 등이 절대주의적 천황

20) 이현희, 1991, 앞의 글, pp.157-158.
21) 김운태, 「日本帝國主義의 韓國統治」 (서울: 박영사, 1986), pp.287-320.

제, 군국주의적 정치체제와 함께 권위주의를 심화시키는 데 긍정적으로 기여하였다.

이를 다시 정리하면, ① 民族主義的 성향, ② 폭력지향적 성향, ③ 권위체에 대한 政治的 不信 및 엘리뜨/대중간의 낮은 신뢰현상, ④ 관료적 권위주의에 따른 면종복배현상과 관료특권의식의 대두 현상인데, 이것이 일본통치하에서 형성된 정치문화의 특성인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폭력지향적 성향이 도덕적 정당성을 얻은 것을 제외하면 朝鮮朝의 전통정치문화적 특성이 크게 변하지 않은 채 그대로 持續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권위관계」라고 부를 수 있는 「권위」에 대한 정향 및 治者 또는 支配層에 대한 피지배층의 정향에서는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 단지 권위체의 대상과 내용이 왕에서 천황으로 바뀌고, 윤리주의 내지는 인격주의에 바탕을 둔 권위가 법치와 형벌주의의 그것으로 변질되었을 뿐이다.

결국 총독전제정치의 이질적인 성격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정체 속에서 강압적으로 추진되었던 고유문화의 말살 내지는 변질작업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극복하면서 우리에게 「공통적이고 익숙한」 정향들이 지속되었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조선조의 정치문화적 특성과 일제통치하의 정치문화적 특성을 고찰하였다. 다음 절에서는 조선조와 일제통치 속에서 형성된 전통정치문화적 특성이 북한의 사회주의체제 건설과정에서 어떻게 변동을 겪으며 또 지속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

22) 당시 일본의 공법학에서는 공공행정관계를 사법관계와 상이한 특별권력관계로 규정하고 관료들에게 '無定量의 충성'을 또는 상관에 대한 '忠實無定量의 勤勞'를 강요함으로써 한국관료제의 특권성과 권위주의적 복종상황을 扶植시켰다고 볼 수 있다. 앞의 책, pp.511-512.

23) 이현희, 1991, 앞의 글, p.160.

2. 새로운 政治文化形成과 傳統政治文化

북한의 경우 사회주의체제를 수립하는 초기 단계에서는 傳統과의 斷絶을 시도했지만 전통의 영향력이 쉽게 약화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하고 난 후, 새로운 체제에 배치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전통을 「活用」하려는 노력이 여러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다. 즉, 전통으로부터의 단절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전통적 정치문화의 여러 요소들을 적절히 취사선택하여 이를 체제유지 및 정통성 확립에 활용하려는 노력이 북한 통치엘리뜨들의 정치행태에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지도자의 權威에 대한 定向을 형성해가는 과정에서 권위에 대한 전통적인 패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이를 북한 정치문화의 새로운 특성으로 표출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제 전통적 정치문화의 영향력이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를 토대로 한 새로운 북한정치체제 형성과정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이 영향력을 북한통치차원에서 어떻게 활용해 왔는가를 살펴 보고자 한다.

먼저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배경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945년 8월 8일 대일 선전포고를 한 소련 극동군 제25군이 만주와 북한에 대대적으로 진격하여 8월 22일에 평양을 점령하고 치스차코프 대장을 사령관으로 하는 북조선 주둔군 사령부를 설치함으로써 군정이 시작되었는데, 마르크스주의의 러시아적 변용인 마르크스-레닌주의는 이 과정에서 북한지역에 함께 流入되었다. 그런데 북한에 유입된 이래 그의 정치문화 형성에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는 무엇보다도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름의 스탈린주의였다. 이것은 스탈린이 소련의 경험과 발전모델을 기준으로 정립한 소비에트 마르크스주의였다.

따라서 동구 또는 중국과는 대조적으로 북한의 역사적, 문화적 특수조건에 적응시킨 북한식 마르크스주의는 처음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 후 3년간의 소련군정기간 동안 민족주의자들과의 관계 및 출신배경이 다른 공산주의자들의 관계를 고려하여 겉으로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를 강력하게 표방하지는 않았지만, 북한을 소련에 예속시켜야 한다는 정치적 목적이 작

용하여 구조적인 면에서 소련 정치체제의 축소판인 인민민주주의 정권이 1948년 9월 9일 탄생하게 되었다.

이런 사정으로, 북한정치문화 구성요소의 하나인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는 철학적인 과학적 사회주의라기보다는 오히려 레닌주의적 특성을 지닌 全體主義的 요소가 강하게 내포하고 있었다. 즉 전체주의 독재정권의 공통된 특징으로 열거되는 이른바 프리드리히(Carl J. Friedrich)와 브레진스키(Zbigniew K. Brzezinski)가 제시한 ① 인간생활의 모든 국면을 규제하는 이데올로기, ② 일인지배의 유일대중정당에 의한 통치, ③ 당과 비밀경찰에 의한 테러체제, ④ 매스미디어의 독점, ⑤ 무력의 독점, ⑥ 계획에 의한 경제의 중앙통제 등의 특징[24]을 북한정치체계는 다 갖추고 있었다.

특히 북한정치체제는 이오네스쿠(Ghita Ionescu)가 제시한 레닌주의적 특징을 모두 충족시키고 있다. ① 전쟁에 기원(war-origin)한 정권출현, ② 생산수단의 독점, ③ 막료국가(apparat states), ④ 목표지향적(teleological) 동원체제, ⑤ 어떤 반대도 불허하는 국가(oppositionless states)라는 특성[25]을 지닌 레닌주의적 전체주의 국가체제를 갖추고 있었다.

즉, 점령공산정권으로 출범한 북한공산정권은 토지개혁 및 산업국유화정책을 정권수립 전부터 감행하여 생산수단의 사유를 처음부터 봉쇄한 후, 오직 수령에게만 책임지는 조선로동당에 의해 지배되는 전형적인 幕僚國家의 모습을 띠어 왔고, 온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 사회건설을 위해 전국가를 동원해 왔다. 또한 民主集中制의 원칙과 集團主義원칙을 내세움으로써 어떠한 반대도 허용하지 않는 레닌주의적 전체주의국가의 모델이 되어 왔다.[26]

---

24) Carl J. Friedrich & Zbigniew K. Brzezinski, *Totalitarian Dictatorship & Autocracy* (rev. ed.;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65), pp.21-22.

25) Ghita Ionescu, *Comparative Communist Politics* (London: Macmillan, 1972), pp.43-50.

26) 李相禹, "序論: 金日成 體制의 特質," 이상우 외, 『북한 40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특성과 변천과정』 (서울: 을유문화사, 1988), pp.17-18.

그런데 이와 같이 정치적으로나 이데올로기적으로 소련의 특성을 혁명적으로 정착시켜 나가던 북한지도부는 스탈린 사망 이후 나타난 국제환경의 변화와 탈스탈린주의 경향에 대처하기 위해 그리고 국내의 권력투쟁에서 승리의 명분을 얻기 위해 당 이데올로기의 수정을 시도하게 된다. 그 결과, 1950년대 후반기에 오면서 김일성은 당내의 사대주의와 종파주의를 숙청하는 과정에서 이데올로기적 정당성을 내세우면서 「主體」를 강조하게 되며,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창조적 적용'이라는 명제를 내세우면서 당내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게 된다.

당내의 사상 및 의지의 통일을 특히 강조하기 시작한 것은 1958년 3월 당대표자회의가 있은 후부터이다. 1956년 8월 당전원회의를 계기로 당내의 불순세력들을 숙청하고 난 후, 이를 대표자회의에서 매듭짓는 과정에서 '당적 사상체계' 확립이라는 것을 전면에 내세우게 된 것이다.

1959년 당기관지인 『근로자』 5월호의 권두에서는 '당적 사상체계' 확립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27]

> "현시기에 당적 사상체계를 더욱 튼튼히 하기 위해서는 김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에 대해 정치사상적으로 철벽같은 지지를 호소하며 당이 정책결정들을 철저히 인식하고 그를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는 습성을 배양하는데 있으며 당의 정책결정 관철을 저해하는 온갖 불건전한 사상, 행동과 종파관계, 지방주의, 가족주의 여독을 종국적으로 뽑아 버리는데 있다. 그리하여 100만 당원이 모두 숨을 쉬어도 같은 숨을 쉬고 말을 하여도 같은 말을 하고 일치하게 행동하는 그러한 확고한 기풍을 전당적으로 수립하는데 있다."

이처럼 '당적 사상체계'는 8월 종파사건으로 인해 야기된 당내 사상적인 동요와 당정책에 대한 좌우경적 시비, 그리고 김일성파에 대한 권력도

27) 김남식, "북한의 사회체제와 이데올로기의 변천," 『북한사회론』 (서울: 북한연구소, 1977), p.72에서 재인용.

전 등으로 어수선하던 당내 분위기를 빠른 시일 내에 수습정리하고 김일성 일인지배체제를 확립하고자 제창된 것이다. 이러한 당적 사상체계 확립문제는 1958년 말부터 시작되어 1960년 말까지 진행된 중앙당집중지도를 통해 전당적으로 이를 위한 투쟁이 전개되었으며 당의 사상사업에서 첫째가는 과업이었다.

그러다가 1961년 9월에 개최된 제4차 당대회에서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지도체계가 확고히 수립되고 그 후 김일성의 개인숭배가 본격화되어 이른바 「혁명전통」 교양이 중요시 되자, 당적 사상체계보다는 김일성 혁명사상에 의한 이데올로기 교육이 무엇보다도 필요했다. 다시 말해서 당적 사상체계보다는 김일성 사상을 내용으로 하는 당의 유일사상 교양이 요구된 것이다.

1968년 4월 22일에 개최된 당 제4기 제17차 전원회의에서 당시 내각 제1부수상이었던 김일은 보고를 통해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다음과 같이 풀이하고 있다.

>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운다는 것은 혁명수행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멀리 내다보는 정치적 수령의 사상으로 전당이 무장하고 그에 기초하여 모든 당원들의 사상의지 행동에 완전하고 무조건적인 통일을 이룩하며 당의 조직적 의사인 수령의 혁명사상을 주도적 지침으로 삼고 당중앙위원회의 유일적 지도 밑에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이 진행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28]

이는 김일성의 혁명사상이 바로 黨의 唯一思想이라는 것을 강조한 연설이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1955년 12월 28일 '당선전선동일군들앞에서' 행한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데 대하여"라는 김일성의 연설내용을 인용해 가면서, "김일성 혁명사상이란 사상에서의 주체, 정치에서의 자주, 경제에서의 자립, 국방에서의 자위

28) 앞의 글, pp.73-74에서 재인용.

의 원칙으로 일관된, 조선혁명을 완성하고 우리 인민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승리에로 가장 정확하게 이끄는 조선의 구체적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된 마르크스-레닌주의"임을 설명하고 있다. 이 무렵부터 북한에서는 마르크스-레닌주의 보다는 이를 북한현실에 창조적으로 발전시켰다는 이른바 김일성 혁명사상이 이데올로기교양사업에서 첫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그 후 1967년 12월에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4기 1차회의에서 「10대 정강」이 발표되면서[29] 김일성 혁명사상은 논리적 체계를 갖춘 주체사상으로 등장하게 된다. 1970년 제5차 당대회에서는 새로 개정된 당규약 서문에 "조선로동당은 맑스-레닌주의와 우리 나라 현실에 맑스-레닌주의를 창조적으로 적용한 김일성 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당의 유일사상이 바로 김일성의 주체사상임을 더욱 명백히 함과 동시에, 이제 주체사상은 마르크스-레닌주의와 같은 위치에 서게 된다.

더욱이 1972년 12월 27일 개정된 사회주의헌법 제4조에서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맑스-레닌주의를 우리 나라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조선로동당의 주체사상을 자기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정권수립 당시의 근간이었던 마르크스-레닌주의를 공식지배이데올로기 범주에서 제외시키려는 의도를 나타내고 있다.

이런 주체확립 추세는 1980년 10월 13일, 조선로동당 제6차 전당대회에서 개정된 당규약 전문에서 "조선로동당은 오직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주체사상, 혁명사상에 의해 지도"됨을 밝힘으로서 이제 북한공식 이데올로기는 더 이상 마르크스-레닌주의가 아님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1992년 4월 9일 개정된 사회주의헌법 제3조에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을 자기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라고 천명함으로써 그러한 입장을 더욱 분명히 하고 있다.

---

29) 국토통일원, 『북한최고인민회의자료집』, 제3집: 4기 1차회의-5기 7차회의 (서울: 국토통일원, 1988), pp.76-107.

이제 이런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배경을 기초로 북한 사회주의 건설과정에서 사회심리적인 정향 및 문화적 체계는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정치체제 수립과정에서 나타난 지도부의 혁명성은 전통정치문화적 요소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여 왔는지 그리고 전통의 영향력은 어떤 모습으로 지속되어 왔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그 과정 속에서 사회구성원들의 정치적 정향은 어떻게 변해 왔는지에 주목하면서 새로운 북한 정치문화의 특성이 형성되어가는 과정을 보기로 한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소련의 영향력 아래 수립된 북한정권은 평양에 입성하자마자 곧이어 사회전반에 걸친 혁명을 시도하게 된다. 그러나 정권 주도권을 둘러싼 출신 배경이 다른 세력들 사이의 갈등, 그리고 해방 당시의 사회 구조적 조건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 따라 사회를 혁명적으로 전환시키는 방법론에 대한 논의는 하나로 일치될 수 없었다. 그런 상황에서 소련의 적극적인 후원을 받고 있던 김일성 중심의 항일 빨찌산 출신들은 해방 당시를 자본민주혁명으로 규정하고 「反帝 反封建」을 기본 과제로 제시하면서 마르크스-레닌주의에 바탕을 둔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제반 개혁적 조치를 제시함으로써 과거와의 철저한 斷絶을 시도하게 된다.

우선 「반봉건」의 기본 과제로서 제기된 것이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1946년 3월 5일 발표한 「토지 개혁」이었다. 이 날 발표된 「토지개혁법령」「토지개혁 실시에 대한 임시조치법」과 3월 8일 발표된 「토지개혁법령에 관한 세칙」은 북한전역에 충격을 준 혁명적인 것이었다.[30]

이들 법은 첫째, 5정보 이상 소유토지 뿐만 아니라 소작주의 토지는 면적에 관계없이 무상몰수 무상분배하고, 둘째, 소작제는 무조건 금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함으로써 기존의 토지소유관계를 전면부정하고 있었는데,[31]

---

30) "秘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중앙일보』, 1992년 3월 26일.

31) 북한 土地改革의 내용과 특징에 대해서는 엘렌 브룬(Ellen Brune)·재퀴스 허쉬(Jacques Hersh), 『사회주의 북한: 북한 경제발전 연구』, 김해성 역 (서울: 지평, 1988), pp.33-47; 高鉉旭, "북한의 토지개혁과 사회주의 이행," 고현욱 외, 『북한체제의 수립과정: 1945-1948』 (서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91), pp.126-138 참조.

그와 같은 조치는 지주와 소작인이라는 토지중심의 신분질서를 사회유지의 근간으로 여겨왔던 뿌리 깊은 傳統觀念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것이었다. 지주들과 결별하고 빈농을 지지기반으로 삼겠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이 조치는 농민에게는 희망으로 다가왔지만 지주들에게는 절망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 후 「땅을 빼앗기는 자」와 「땅을 새로 갖게 되는 자」 사이의 死鬪에 가까운 계급투쟁적인 양상[32]은 당시 북한인구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빈농의 「자작농이 되고자 하는 염원」에 밀려, 약 4만명의 지주[33]들이 몰락하고 약 72만호의 농가[34]를 실질적 수혜자로 만든 채 토지개혁이 시작된 지 약 한 달 만에[35] 대체적으로 마무리를 짓게 된다.

또한 「反帝」의 과제로서 제기된 것이 1946년 3월 23일 발표된 「20개 정강」이었는데, 여기서는 "조선의 정치 경제생활에 존재하는 모든 일본 제국주의의 잔재"를 일소하는 것과 함께 일본인 재산과 식민지적, 봉건적 법률의 처리에 대해, 그리고 반혁명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反帝國主義, 反封建 革命段階의 주요 과업들이 제시되었다. 이 政綱의 주요 내용을 볼 때,[36] 북한지도부는 무엇보다도 과거로부터의 일체 단절, 특히 일제잔재를 청

32) 앞의 신문, 1992년 3월 30일.

33) 1943년 통계로 볼 때 북한의 총 경지면적 198만 2,431정보 중 지주소유 면적은 115만 4,838정보로 총 경지면적의 58.2%이나 되었으나, 이 당시 지주의 수는 총 농민 호수 100만 4,586호의 4% 밖에 안 되는 46,134호에 불과했던 반면, 전농가의 60% 이상이 되는 빈농은 전체 경작지 중에서 겨우 5.6%만을 소유하고 있었다. 민주주의 민족전선 편, 『해방조선 II』 (서울: 과학과 사상, 1988), p.544; 엘렌 브룬·재퀴스 허쉬, 1988, 앞의 책, p.34.

34) 앞의 책, p.38.

35) 강정구, "북한사회구조의 변혁," 강정구 외, 『북한의 사회』 (서울: 율유문화사, 1990), pp.53-54.

36) 「20개 정강」의 주요 내용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① 조선의 정치, 경제생활에서 과거 일제통치의 일체 잔재를 철저히 숙청할 것.

② 국내에 있는 반동분자와 반민주주의적 분자들과의 무자비한 투쟁을 전개하며 파쇼적이고 반민주주의적인 정당과 단체 및 개인들의 활동을 절대 금지할 것.

③ 일제통치시에 사용하였으며 또한 그 영향을 받고 있는 일체 법률과 재판기관을 폐지하고 인민재판기관을 민주주의 원칙에서 선거할 것이며 일반공민에게 법

산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을 알 수 있다.

이어서 그 해 8월 12일부터 시작된 산업국유화 조치가 실행되면서 새로운 사회건설을 향한 사회구조개혁은 사회전반에 걸쳐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사회구석구석까지 개혁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했다. 주원인은 사회변동을 수용하기를 거부하는 농민들의 의식 및 家族構造에 있었다. 즉, 사회적 진보의 강한 힘을 결정적으로 붙들어매는 방해요인은 바로 가장 전통적이고 후진적인 농민생활방식이었던 것이다. 이를 북한지도엘리뜨들은 처음에 깨닫지 못하고, 그들은 물적 토대인 경제적 구조의 혁명을 완수하면 혁명은 성공하리라 생각하고 있었다.

가장 실질적인 문제는 무엇보다도 농촌은 물론 도시까지 포함하여 가족구조로부터 여성의 노동력을 해방시켜 사회적으로 동원할 수 없는 데 있었다.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인력이 그대로 전통적인 後進性을 고수한 채 후진성의 전달자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심각한 문제는 얼마 지나지 않아 일으킨 한국전쟁의 와중에서 초래된 노동력부족현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해소될 수 있었지만,[37] 초창기 사회개혁의 추진력을 주춤하게 만든 중요한 요인이었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와 함께 사회주의 건설과정에서 부정적인 요소로 등장한 것은 다름아닌 사회성원들의 전통적인 의식수준이었다. 예컨대, 토지개혁과정에서도 「지주는 상전」이라는 생각이 몸에 밴 농민들로 하여금 자기 몫의 토지를 스스로 얻어내도록 유도하는 것이 결코 쉬운 작업이

률상 동등권을 보장할 것.

④ 일본인, 일본국가, 매국노 및 계속적으로 소작을 주는 지주들의 토지를 몰수할 것이며 소작제를 철폐하고 몰수한 일체 토지를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분배하며 그들의 소유로 만들 것. 관개업에 속한 일체 시설을 무상으로 몰수하여 국가가 관리할 것. 김일성, 『김일성 선집』 (동경: 동방사, 1965), pp.14-15.

37) 한국전쟁 기간 중에 청장년 남자들이 전선에 동원되어 노동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녀성보잡이 운동」등을 벌임으로써 효과적으로 동원할 수 있었다. 강정구, "한국전쟁과 북한사회주의 건설," 『한국과 국제정치』, 제6권 제2호 (1990년 가을), p.105; 엘렌 브룬·재퀴스 허쉬, 1988, 앞의 책, p.98.

아니었다.

"「그래도 옛날 상전인데 언제는 신세지고 이제 세상이 바뀌었다고 등을 돌릴 수 있겠는가」라는 고정관념으로 인해 지주를 강제로 이주시키는 일에서 빠지거나 빼앗은 지주집에서 살다가 도망치는 일도 많았다"는 前북한 고위관리인 徐容奎의 증언[38]에서도 당시 상황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북한지도층은 의식개혁사업의 일환으로 선전사업을 사회구조개혁사업과 함께 병행하게 되는데, 이의 한 방법이 노동자 선전대의 조직이었다. 북한 전역의 각 공장에서 뽑은 핵심노동자와 진보적 학생들로 노동자 선전대를 조직하여 이들을 각 지방 농민위원회로 파견하여 강연이나 개인 접촉을 통해 토지개혁의 정당성과 관련된 意識改革을 시도한 것이었다.

그 후 의식개혁의 일환으로서 북한지도층이 개혁대상으로 삼은 것은 지금까지 사회를 유지해 왔던 여러 가지 통념 및 전통적인 정치적 정향이었다. 이를 깨뜨리기 위해 그들은 「좌우경 기회주의」, 「사대주의」, 「교조주의」, 「수정주의」, 「형식주의」, 「자본주의」, 「봉건주의」, 「파벌주의」(종파주의 또는 분파주의), 「지방주의」 및 「가족주의」 등의 이름을 붙여 사회개혁에 방해가 되는 전통적 사고방식을 비판하기 시작했다. 이는 물론 중국과 소련의 관계 변화를 비롯한 국제적 환경의 변화와 이로 인해 나타난 국내의 권력투쟁에서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명분찾기에서 시작된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인민들의 意識改革이 미진한 데도 그 원인이 있었다.

예컨대, 形式主義에 대한 비판은 정적제거 및 의식개혁의 차원에서 함께 제기한 것임을 다음 김일성의 말[39]에서 알 수 있다. 특히 政敵을 제거하는 명분을 이데올로기적 성향에서 찾지 않고 비판대상인물의 말씨나 태도에서 찾는 것은 김일성이 자주 사용하던 전술이었다.

---

38) 앞의 신문, 1992년 3월 30일.

39) 김일성,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 데 대하여", 「김일성 저작집」, 제 9권(1954. 7 - 1955. 1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pp. 480 - 481.

"우리 선전일군들의 형식주의는 선전사업에서 사물을 과장하는데서도 표현되고있습니다. 례를 들면 '총궐기하였다'느니, '총동원되었다'느니 하는 등의 과장된 표현이 오래전부터 연설과 론설에서 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에 대하여 몇번 박창옥에게 충고한 일이 있습니다. 박창옥은 자기가 만들어낸 이 '총'바람에서 벗어나지 못하였기때문에 과오를 범한것입니다. 그는 나중에는 '대'자에다 '최'자를 더 붙여서 '최대'라고 하였으며 '위대'하다는 형용사를 아무데나 함부로 붙였습니다. 이것은 그가 한문에 무식한탓인지 혹은 사상관점이 잘못된 탓인지 알수 없는 일입니다.

선전사업을 실속있게 하지 않고 이와 같이 풍을 치면 사람들은 승리에 도취하여 안일하게 될것입니다. 아래 일군들이 허위보고를 하는것도 이런 폐단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형용사 하나 쓰는것이 간단한것 같지만 잘못 쓰면 일을 망치는 화근으로 될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철저히 고쳐야 하겠습니다."

형식주의와 함께 자주 비판의 대상에 오른 것은 家族主義, 地方主義, 宗派主義였다. 김일성의 입장에서는 이 세 가지는 서로 다른 성격을 지니는 것이 아니라 동질의 성향을 지닌다고 판단했다. 가족주의는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서로 싸고돌면서 무원칙한 정실관계를 맺는 사상관점이나 행동"이라고 하면서 이는 "주로 결함을 서로 싸고돌면서 투쟁하지 않으며 특히 간부사업에서 당적 원칙을 떠나 친척, 친우 관계와 같은 정실, 안면관계에 의하여 간부문제를 처리하는 데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또한 "가족주의는 종파의 싹이며 그것이 자라나 종파가 되므로 노동계급의 당 내에 가족주의가 생기면 당의 사상의지 및 행동의 통일이 약화되고 당의 노선과 정책이 관철될 수 없는" 해독을 지니고 있다고 하면서 가족주의의 사상적 근원은 個人利己主義에서 비롯된다고 공격하고 있다.[40]

40) 사회과학원 철학연구소, 『철학사전』 (평양, 1985; 서울: 힘, 1988), p.13.

地方主義도 자기지방의 특성을 운운하며 중앙의 의도를 제때에 받아들이지 않는 종파주의 싹으로서[41] 두 성향 모두 종파주의의 온상이라고 비난하면서 이를 없애지 않고는 당의 단합 및 정책의 집행이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특히 종파주의는 항일혁명투쟁의 과정에서 그 해독을 뼈저리게 경험했다고 하면서 이는 혁명대오를 분열 와해시키며 혁명과 건설을 망치는 주범이라고 맹공격하고 있다.

그런데 사회주의 건설과정에 미치는 영향이 그 무엇보다도 부정적이고 반동적이었던 유교주의 의식전반에 대해서는 의외로 부드러운 어조로 비판하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儒敎에 대해서는 봉건유교도덕 또는 봉건유교사상이라는 이름으로 비판을 하면서, 단지 과거의 역사를 객관적으로 서술하는 정도에서 그치거나 여성의 자유를 구속한 점에 촛점을 맞추어 부정적인 평가를 할 뿐, 현재의 부정적 영향력에 대해서는 자제하고 있는 인상을 주고 있는데,[42] 이는 사회주의 건설과정에서 전통과의 단절을 시도하여 반혁명세력을 약화시키는 데 촛점을 두면서도 유교적 의식구조에 젖은 전통적인 사회성원 모두를 적대시함으로써 전체적인 혁명역량을 감소시키지 않으려는 정책적인 고려가 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의식개혁의 과정에서 북한주민들에게 주입시키려고 노력한 것은 民族的 自矜心이었다. 이는 민족적 자부심을 심어줌으로써 일제식민통치의 유산으로 인해 한국인들의 마음 속에 남은 민족적 열등감을 해소시킴과 동시에 사회주의체제건설의 주인의식을 불러일으켜 혁명적 열의를 북돋우려는 필요에서 나온 것이었다. 이 사업에 북한지도층은 막대한 노력을 들이게 되는데, 이런 취지에서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이 「歷史再解釋」 작업이었다.[43] 그 결과, 인민대중에게 자신들의 民族的 主體性을 세울 수 있도록 과거의 역사를 인식시키기 위해 한국의 역사와 문화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수행되었는데, 특히 사회주의체제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41) 앞의 책, p.691.
42) 앞의 책, pp.266-267.
43) 金英秀, 1992, 앞의 글, pp.173-201 참조.

위해 마르크스-레닌주의에 의한 유물사관적 역사재해석 작업이 역사학 전반에 걸쳐 활발히 진행되었다.

이렇게 사회주의혁명의 저해요인을 불식시키려는 의식개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회주의 건설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던 결정적 계기는 1953년 8월에 처음으로 제시된 「農業協同化」사업에 있었다.[44]

1946년 초에 실시됐던 토지개혁이 반봉건 민주주의혁명의 기초과정을 이루는 변혁이었고, 봉건적인 지주적 토지소유제도의 폐기와 토지의 재분배를 중심으로 하는 변혁이었다면, 1953년부터 시작된 농업협동화는 소농민경영이 압도적 비중을 점하고 있는 상태하에서 제기된 농업의 사회주의적 개조의 과정이었고, 농민의 집단적 소유제에 기초한 사회주의적인 집단적 대경영으로 이행하는 변혁이었다. 다시 말해 토지개혁이 농민자신의 요구에 기초하고 변혁의 기초에 농민을 두었던 데 반해, 농업협동화는 프롤레타리아의 공업 및 농업의 재편성 과정에 포함되는 變革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45]

농업협동화는 당의 지시에 따라 공동경영의 비중정도에 따라 세 가지 형태로 추진되었는데, 제1형태는 고정적 노력협조반, 제2형태는 반사회주의적 형태, 제3형태는 완전한 사회주의적 형태를 띠고 있었다.[46] 이 중에

---

44) 북한의 농업협동화 운동은 1953년 8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6차 총회에서 처음으로 거론된 후, 1954년 1월 "농업협동화경영의 조직문제에 대하여"라는 당 중앙위원회 지시에 의해 농업협동조합의 세 가지 형태와 협동경영의 관리운영원칙이 수립되고, 이는 1954년 3월 "농업협동경영의 강화와 발전을 대책"이라는 내각결정에 의해 북한전역에 걸쳐 실시된다. 김종채, "북한 농촌사회의 변모," 강정구 외, 앞의 책, p.110.

45) 장상환, "토지개혁과 농업협동화 과정의 특질," 염홍철 외, 『북한사회의 구조와 변화』(서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87), pp.96-97.

46) 고정적인 노력협조반인 제1형태는 전통적인 품앗이반의 발전된 형태로서 토지와 농기구는 통합하지 않고 작업만을 공동을 하는 전통적 협동방식을 그대로 살린 방식이었으며, 제2형태는 공동으로 경작하되, 토지의 사유권을 인정하고 생산물은 작업일수에 따라 분배하고 일부분만 출가한 토지지분에 분배하는 이른바 半社會主義的 형태를 띠었으며, 제3형태는 토지와 노동, 생산수단을 모두 협동조합의 집단 소유로 하고 경영도 집단경영방식을 채택하여 생산물의 분배를 노동의 질과 양에 따라 현물현금으로 행하는 完全한 사회주의적 형태였다. 엘렌 브룬재퀴스 허쉬, 1988, 앞의 책, pp.98-99; 장상환, 1987, 앞의 글, pp.116-117; 주

서 제1형태는 작업만을 공동으로 하는 전래의 공동노동조직인 「소겨리」(소 교환)나 「품앗이」(노동 교환)와 비슷하여 농민들이 저항감 없이 참여할 수 있었기 때문에, 농민들을 사회주의적 협동화의 경험을 쌓게 하는 과도적 형태로 이용되었다. 그러나 협동화과정 초기부터 제1형태에서 제3형태에로의 단계별 추진을 강조함으로써, 사실상 1954년 6월부터는 제3형태가 주를 이루게 되고 1958년 8월에 이르러서는 제3형태로서의 농업 집단화를 완성하게 된다.[47]

이는 북한사회를 사회주의체제로 개혁하는데 있어서 일차적인 성공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사회주의의 승리를 장담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 왜냐하면 협동화를 시행하는 동안 농업의 산출량은 감소되지 않았고, 반대로 그 과정은 생산에서 점차적인 증가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또한 협동화의 완성은 사회적인 측면에서 착취의 주된 근원이 농촌지역에서 완전히 제거되었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이다.[48]

그런데 農業協同化의 또 다른 중요한 의미는 사회구성원의 심리체계 및 문화구조를 전통적인 영역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데 있다. 실제로 농업협동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회성원들은 전통적 가족구조 및 생활관습에서 벗어나 동원될 수밖에 없었고, 새로운 생산방식 및 분배방식으로 인하여 기존의 전통적인 생활패턴 및 사고방식을 바꾸지 않고는 새로운 사회구조에 적응하기 어려웠다. 그 결과 전국적인 농업집단화 조치는 점차 사회구조의 전통적 요소의 성격을 변질시

강현, 『북한민속학사』 (서울: 이론과 실천, 1991), p.45.

47) 農業協同化는 1956년 4월 조선로동당 제3차대회에서 "농업협동화작업은 농촌의 계급구성과 농민 각 계층의 동향으로부터 출발하여 우선 빈농에 튼튼히 의거한 후 중농과 동맹을 강화하여 부농을 제한하며 이를 점차적으로 개조시켜야 한다"는 계급정책에 입각한 협동화 완성에 대한 과업이 제시되면서 급격한 진전을 보게 된다. 이에 따라 1956년 말에는 전체 농가 호수의 80.9%가 협동조합에 포함되었으며, 1958년 8월에는 협동조합을 리 단위로 통합하는 사업이 진행되었고, 1959년 1월에는 전국농업협동조합대회를 소집하여 새농업협동조합기준규약(잠정)을 채택하게 된다. 국토통일원, 『朝鮮勞動黨大會資料集』, 第1輯 (서울: 국토통일원, 1988), pp.310-311, 324-325; 주강현, 1991, 앞의 책, p.45.

48) 엘렌 브룬-재퀴스 허쉬, 1988, 앞의 책, pp.100-101.

켜가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변화는 가족 권위의 상징인 아버지(父)의 위상변화였다. 북한사회주의체제에서는 무엇보다도 사유재산권을 인정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가정은 가정중심의 생활영위보다 전체사회에 구속성을 더 갖게 되었다. 즉, 家主의 家財權이 상실됨으로 인해 실질적인 家督權을 행사할 수 없게 되고 더욱이 당이나 단체가 식구들을 묶어둠으로 인해 家長은 형식적인 가족의 대표로 전락하게 되었다. 게다가 1947년에 호적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실제로 행사할 수 있는 父權은 미미한 것이 되고 말았다. 이는 전통적으로 인식되어온 절대적 권위의 산화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전통적 권위의 상징인 父權의 약화와 함께, 가족들의 퍼스낼리티도 조직생활을 통한 집단활동을 함으로써 지금까지의 내향적이고 가족의존적인 성향에서 점차 외향적이고 집단중심적으로 변하고 있었다.

아울러 전통적 권위의 상징이던 老人 역시 동등한 사회구성원의 하나로 전락하고 말았다. 가정문제를 결정할 권한도 상속해줄 재산도 이미 잃은 지 오랜 그들은 이제 단순한 조수역할 밖에 할 수 없었다.

한편, 이렇게 약화된 부(父) 대신 어머니(母)의 역할과 위치는 새로운 가족구조에서 서서히 향상되고 있었다. 또한 어머니의 권한과 역할은 정책적으로 장려되고 있었다. "모든 어머니는 미래의 공산주의자를 양성한다는 깊은 책임의식을 가지고 자식을 키워야 한다"[49]라는 말이 이를 단적으로 말해준다. 그러나 실제로는 여성들이 새 세대를 책임있게 기르고 가르칠 시간적 여유가 너무 없었다. 즉, 사회주의 건설에서 혁명의 수레바퀴 한 짝을 떠맡으면서 동시에 혁명전사를 잘 키워낼 수는 없었다.

이상에서 볼 때, 農業協同化를 통한 사회주의 건설과정은 가장 중요한 전통적 사회단위인 家族의 구조 및 위상을 근본적으로 변질시키는 효과를 낳았던 것이다. 그 결과 유교적인 특색을 지닌 전통적인 冠婚喪祭도 변질되기 시작하여[50] 혼인 주례도 당간부가 주관하는 공식행사로 변해갔고, 장

49) 김성애, "조선에서의 녀성해방운동에 대하여," 『조선녀성』 1 (1971), p.7.
50) 『로동신문』, 1985년 9월 11일자에는 '조상전래의 미풍양속은 사회주의 조건에

례도 친척의 도움없이 행정기관의 도움을 얻어 조촐하게 치르게 되었다. 조상제사도 조촐하게 가족만 모여서 지내는 형식으로 바뀌어갔다.[51]

또 하나의 사회결속력의 매체였던 전통적인 친족조직은 토지개혁으로 인한 5정보 이상의 땅을 몰수당함으로써 일찌감치 파괴되기 시작했으며, 협동조합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실시한 인구이동사업으로 인해 거의 와해되어 버리고 말았다. 그러나 한 가지 주목할 사실은 북한 통치엘리뜨들이 전통적인 親族組織과의 정면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문중소유의 묘지에 관련된 산림은 몰수대상에서 일단 제외하는 융통성을 보인 점이다. 여기서, 건드려서는 안 될 부분까지 무리하게 혁명함으로써 전체 혁명역량을 감소시키지 않으려 했던 북한지도층의 통치철학을 다시 한번 엿볼 수 있다. 그 만큼 전통의 영향력은 사회주의건설 초기 단계에서 사회구성원의 문화체계내에 잔존하고 있었으며, 북한 정치엘리뜨들은 이를 잘 인지하고 있었다.

또한 인력수급정책의 일환인 인구의 지역적 재배치 및 농업협동화는 북한의 전통적인 부락조직의 기능을 상실하게 만들었고,[52] 족보의 회수 및 한자교육의 폐지도 혈연관계를 유지하려는 傳統文化에 결정적 타격을 입

맞게 고쳐 나가야 함'을 제창하고 있다.

51) 지금 현재 비공식적으로 가족단위로 제사를 지내고 있는 일부분의 현상을 빼놓고는 전통적인 모습은 거의 사라진 셈이다. 공산화 초기에는 한동안 조상제사의 관습을 근절시키려고 했으나 심한 반발에 부딪쳐 이 조치는 완화되었고 현재는 방임상태에 있다. 물론 부락단위, 문중단위의 제의적은 찾아볼 수 없으나 家祭祀는 방임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가족끼리 조촐하게 지낸다. 얼마전부터 노동당에서는 '社會主義的 祭祀'를 권장하면서 고인의 생존시의 사상성이나 업적 등을 비판하고 반성의 기회로 삼으라고 지도해 오고 있다. 따라서 북한에서는 가제사에 당간부의 제사참여를 권장하고 있으며 이것이 새로운 관습이 되고 있다. 이로 인해 불행한 처지에 있었던 조상들의 자손들이나 행정권의 지배층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조상제사가 그들의 조상들이 소위 인민편에 섰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기회가 되지만, 이는 제사를 통해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일부층에 국한된 새 관습이라 하겠다. 떳떳하지 못한 공산화 이전의 엘리뜨 계층출신에게는 이를 오히려 피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일성, 『김일성 저작집』, 제29권 (1974. 1 - 1974. 1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5), pp.35-36.

52) 최인학, "남북한 기층문화 전승실태," 『통일정책』, 제4권 3호 (1978), pp.189-193.

했다.

이렇게 꾸준한 사회구조개혁 및 의식개혁을 통해 북한주민들은 과거의 권위체로부터 해방되면서 누구나 단일 노동자 계층이라는 새로운 개념에 소속되어 갔고, 또한 사회주의 조직체계라는 새로운 「조직망」(web of organization)의 구성원으로서 탈바꿈해 가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혁명적으로 변한 사회구조 및 정치체계 속에서 사회구성원의 정치적 신념·태도·가치는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새로이 형성된 政治的 定向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새롭게 태어난 「사회주의 인간형」의 정치적 行爲類型은 과거와 어떻게 달라졌는가? 전통정치문화적 요소는 사회주의 건설단계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사회주의 건설초기부터 혁명전사의 양성에 각별한 관심을 보이던 김일성은 어린 자녀가 어머니와 함께 있는 시간이 적은 것보다는 社會主義敎育을 시킬 능력이 어머니들 자신에게 없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여,이를 개선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어머니 학교」를 통한 어머니 再敎育을 실시하게 된다. 그러나 자기자식에 대한 맹목적인 사랑이 앞서 아이들을 사회주의적 혁명전사로 키우는데 많은 부작용이 있음을 발견하고는, 부족한 노동력을 배가한다는 명분 아래 전국적으로 託兒所와 幼稚園을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하게 된다. 이는 새 세대는 국가주도의 정치사회화 과정을 거치게 함으로써 사회주의건설은 물론 체제 지지자로 육성하겠다는 장기적인 구상에서 나온 정책이었다. 즉, 혁명의식이 부족할 뿐 아니라 전통의식에 젖어있는 어머니한테 敎育을 맡기는 것보다는 국가주도에 의한 체계적인 교육을 함으로써 전통과 단절된 「共産主義 人間型」을 주조하기로 결정했던 것이다.

따라서 사회주의 건설과정에서 태어난 새 세대는 진정한 의미의 「北韓人」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유아기 때부터 탁아소 및 유치원에 맡겨져 교육됨으로써 기존 가정의 전통성으로부터 해방되었을 뿐 아니라, 여성

노동력의 흡수정책으로 인해 「엄마」가 사회주의 노력일꾼으로 동원됨으로써 傳統의 전달자였던 「엄마」로부터도 격리되었기 때문이다.

託兒所와 幼稚園은 북한정부의 재정으로 운영되었다. 연도별로 증가추세를 보여 온 탁아소와 유치원의 숫자는 1966년 10월 20일 "어린이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육성하는 것은 보육원, 교양원들의 영예로운 혁명임무"라는 김일성의 연설이 발표되고 난 후 급격히 증가하면서 어린이보양교육사업은 일대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53]

이러한 정책적 관심 속에 북한의 어린이는 국가적 어린이보육교양제도에 따른 탁아소와 유치원의 설립으로 전통의 영향력과 부모의 영향으로부터 해방되어 定型化된 유형으로 키워지게 되었다. 그리고 탁아소와 유치원은 교양원양성소에 배출한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에 투철한 선생님에 의해 운영됨으로써 사회주의 혁명전사의 싹을 키우는 역할을 훌륭히 수행할 수 있었다.

1세부터 4세까지는 탁아소, 5세부터 6세까지는 유치원에서 교육받은 후 7세가 되면 초등교육제도에 해당하는 4년제 인민학교에 의무적으로 가게 되는데, 그 동안 「엄마」를 여성근로자로 둔 자식의 대부분(60-70% 이상)은 어린이보양교육기관에 맡겨짐으로서 공산주의 교리에 의해 사회화과정을 밟게 된다. 또한 실습목적으로 1주일 혹은 1개월씩 격리되어 교육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을 거치다 보면 전통적인 부모자식간의 정이나 관계는 형성되기 어렵게 되어 있다.

한편 이런 단계를 거치면서 교육받은 결과, 아이들은 전통적인 아이들의 성향과는 달리 보다 外向的이고 集團主義的 성향을 강하게 드러내게 된다.

---

53) 김일성 교시가 발표된 직후 갑자기 증가한 유치원 및 탁아소는 1972년에 와서 만 5세 어린이에 대한 학령 전 1년간의 의무교육제를 실시하면서 그 수효가 배 이상으로 증가한 후, 지금 현재 약 60,000개가 운영되면서 350만명의 아이들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윤재근·이상호·박상천, 『북한의 문화정보』 I (서울: 고려원, 1991), pp.146-147.

게다가 부모의 이름보다 김일성의 이름을 먼저 익힌[54] 「예비 공산주의자」들은 인민학교에 가서도 조선소년단에 가입하여 활동함으로써 투쟁정신 함양과 농촌생활문화건설에 적극참여하고, 고등중학교에 가서는 사로청에 가입함으로써 당의 후비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게 된다. 졸업후에도 관련단체생활을 하면서 끊임없는 조직생활은 계속된다. 직장, 성별, 지역에 따라 남자는 최소한 1개 이상, 여자는 보통 2개 이상 조직에 가입함으로써, 조직으로 시작해서 조직으로 끝나는 생활은 하나의 삶의 패턴이 된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北韓人」을 만드는 정치사회화 과정이다.

그런데 사회주의 성공요건으로서의 敎育 역할을 강조하던 김일성의 지대한 관심도 그 공부방법은 혁명적이지 않고 다분히 「傳統的」이었다. 예컨대, 혁명사상 고취나 김일성 유일사상 주입에서는 유교적인 방법을 채택하고 있었다. 反復讀書의 强調가 그것이다.

이는 조선의 소학교에서 전통적인 방식으로 교육을 받은 경험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金日成은 1912년 4월 15일, 평양 근교 만경대에서 태어나 소학교 6년을 만주의 바다오거우(八道溝)소학교에서 4년, 평양근교 彰德학교에서 2년, 마지막으로 만주 푸쑹(撫松)소학교를 졸업하는 등 서로 다른 세 곳의 학교를 다녔다. 중학교 2년 동안 그는 만주에 있는 두 학교, 곧 華成義塾이라는 한인학교와 위원(毓文)중학교라는 중국인 학교에 다닌 적이 있는데,[55] 김일성은 이 때 받은 교육의 영향으로 최상의 공부방법으로서 첫째, 정독하는 독서법, 둘째, 독서를 통한 자기수양방법을 들고 있다.[56]

특히 가능한 한 책을 反復해서 읽는 것이 제일 좋은 학습법이라고 권하

54) 안드레이 란코프, 『평양의 지붕 밑: 소련 레닌그라드대 란코프교수의 북한 생활 체험기』 (서울: 연합통신, 1991), pp.108-109.
55) 서대숙, 『북한의 지도자 김일성』 (서울: 청계연구소, 1989), p.5.
56) 김일성, "항일무장투쟁시대의 우리말," 『문화학습』, 3 (1970, 8), p.3.

고 있다. 책을 여러 번 읽다보면 자연히 모든 것을 깨우치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앎과 실천은 불가분의 관계라고 하면서 실천을 통한 자기수련을 계속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이것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는 자아비판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한다. 개인적인 자아비판의 방법으로 일기를 쓰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으며,[57] 당간부들은 공식적인 자아비판에서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먼저 배우고 먼저 깨우치는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지시에 맞추어 만들어진 것이 「金日成 敎示」를 암기하고 그 뜻을 학습하기 위한 학습회 및 토론회, 연구소조 및 학습소조, 학습실 마련이었다. 주요 내용은 김일성과 당에의 충성심, 공산주의 교양, 계급의식과 혁명정신, 그리고 비판정신을 교양 고취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현상은 『로작』 암송경쟁이었다.[58] 경쟁의 원리를 도입하여 개인 아닌 집단별로 포상제도를 마련하고 천리마 학급, 천리마 학년, 천리마 학교 등의 名譽呼稱을 수여함으로써 「김일성말씀 익히기 운동」은 전사회에 빠른 속도로 전파되어 나갔다.

특히 젊은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조직의 학습열기는 끝이 없을 정도였고, 암기 암송의 형식을 넘어 나름대로의 독창적인 숨은 뜻 찾기에 여념이 없었다. 한마디로 그들은 김일성의 교시나 저작을 자신들의 절대적 정신적 지주로 삼았고, 영적인 식량으로 삼았다. 더욱이 노동신문에서는 매일 매일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얼마만큼 학습했다는 기사를 실어 경쟁심리를 부추켰다.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 동무들은 작년 한 해 동안 무려

57) 김일성, "혁명화와 일기쓰기," 『로동 청년』 (1971. 5. 8), p.2.
58) 김현희, 『이제 여자가 되고 싶어요』, 제2부 (서울: 고려원, 1991), pp.69-70; 안드레이 란코프, 1991, 앞의 책, pp.109-110.

15,000페이지에 달하는 로작을 읽었읍니다. 올해에는 작년보다 많은 20,000페이지를 읽기로 작정하였읍니다. 몇몇 동무들은 이미 4월 말에 제5차 조선로동당대회에서 말씀하신 김일성 수상동지의 교시는 물론, 로작 10,000페이지 이상을 읽고 발표를 완료하였읍니다."[59]

이러한 열기는 누구누구를 따라 배우자는 모범적 사례까지 제시되면서[60] 학교안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도 가족단위, 협동농장 단위, 공장 단위, 군부대별로 경쟁(競爭)이 일어나면서, 사회전체에 김일성 유일사상이 지배하게 되었다. 그리고 북한의 젊은층은 점점 더 정형화된 단일 성향을 띠게 되면서 혁명의 지지자로, 혁명의 대를 이을 후계자로 자라나고 있었다. 그들에게는 자유롭게 생각하거나 자기말을 독창적으로 구사할 능력이 없었으며, 또 그러한 기회가 한 번도 주어지지 않았다.

이런 유형의 열기는 일제시대에도 있었다. 강제적 혹은 자발적으로 일본천황의 칙령을 익히고 皇國臣民의 誓詞를 제창하던 분위기와 흡사하다. 황국신민의 집이란 칭호를 받기 위해 온 가족이 일본어를 익히고 천황의 칙령을 암송하던 역사적 경험이 이미 존재한 적이 있다. 따라서 일제시대의 경험이 있던 세대들은 북한의 방법과 열기가 새로운 것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조선조 아이들이 「소학」을 읽던 것과 비교할 때, 방법에서는 비슷할지 몰라도 그 동기는 분명히 다르다. 조선조 젊은 유생들은 유교사회질서에 참여하고 그 속에서 신분을 상승시키기 위하여 암기를 강요당했던 것이다.

결국 외견상으로 보면 김일성사상학습 열기는 이전에 존재했던 일본통치하의 경험과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제하의 경험이 김일성에 대한 뜨거운 충성심을 유발시키는 데 결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단정하는 것

59) "모두가 책읽는 혁명적 학습기풍," 「로동신문」, 1971년 5월 22일.
60) "이 학생의 모범을 본받아라," 「로동신문」, 1971년 8월 18일.

은 위험한 생각이다. 즉 전통의 지구력과 영향력을 입증하는 예로 이 사실을 제시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김일성 노작학습열기가 불붙기 시작하던 1970년초에는 이미 北韓에서 태어나 사회주의교육을 받은 세대들이 그 운동의 主體를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들은 조선조의 봉건성과 일제유산과의 단절정책을 계획적으로 시도한 시기에 자라난 세대로서 가장 전통과 거리가 먼 계층이었기 때문이다. 단지 전통의 영향력을 고려한다는 입장으로 기울어 평가한다면, 일제의 경험을 체험했던 세대들에게는 보다 익숙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거부반응이 적었거나, 일제의 경험상 사회적 대세를 거역하기보다는 따르는 것이 낫다는 심리에서 채념적 순응이 그만큼 빨랐는지도 모른다.

이러한 정치사회화과정을 통해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견결한 혁명가로, 지덕체를 갖춘 공산주의적 새 인간으로 키워진"[61] 북한 새 세대는 김일성의 존재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이는 김일성에게 주어진 呼稱을 분석해보면 알 수 있다. 그에게 붙여진 다양한 호칭으로는 우선, 평등한 친구관계의 의미를 띠는 「동지」, 최고군통수권자로서의 「원수」, 항일무장투쟁지도자로서의 「장군」, 정부수반으로서의 「수상」, 그리고 북한 영도자이며 지도자인 「수령」 등의 공식적 호칭을 예로 들 수 있다. 이 호칭들은 그 동안 김일성의 업적을 높이 평가하고 김일성 자체를 偶像化하는 분명한 의도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한편 또 다른 호칭으로 「어버이」와 「아버지」가 쓰이고 있는데, 이는 다분히 가족주의적이고 血緣關係를 나타내는 용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에서도 父라는 단어가 천황을 대신해서 혼치않게 쓰이는 경우가 있었지만[62]

61)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1972년 개정) 제39조.

62) 일본천황은 일본의 건국신화인 皇道史觀에 준거하여 일본민족에게 군림하면서, 대내적으로는 국민에게 친밀하게 온정으로 군림하는 최대최고의 '家父'로서 정신계의 지배자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 주권자로서 만능의 군권 또는 제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추앙받고 있다. 김운태 외, 1989, 앞의 책, p.166.

공식호칭으로는 쓰이지 않았다. 또한 중국의 장개석이나, 한국의 이승만이나 박정희를 지칭해서 國父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경향도 사라진지 오래이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어버이와 아버지란 호칭을 1967년경을 시점으로 해서 둘다 공식호칭으로 쓰고 있다.

또 하나의 특이한 점은 김일성 이름 앞에 붙는 修飾語의 종류이다. 이 수식어도 두 종류로 분류할 수 있는데 하나는 「위대한」, 「천재적」 등과 같은 지도자의 업적을 기리는 형용사이고, 다른 하나는 「고마운」, 「자애로운」, 「영원한」, 「태양의」과 같이 지도자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는 단어이다.

이런 호칭들을 살펴볼 때, 북한의 김일성은 역사상 어떤 독재자도 행하지 못한 절대적 통치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또 이 호칭은 그의 절대적 통치를 유지하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과거에 가족이나 가문의 웃어른들에게 향하던 공경심과 절대적 권위부여의식을 김일성에로의 충성과 흠모로 전환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

가족개념이 가족내에 머물지 않고 國家全體로 확장된 것이다. 인민들에게 「동지」의 위치에 놓여 있을 지도자는 「아버지」나 「어버이」의 위치로 변질되면서 한층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심리적 지지대를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공산주의적 새 인간형을 만들려고 노력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전통의 영향력을 거부하지 않고 통치의 정통성을 유도하는 방법으로[63] 인민의 전통적 잠재의식을 政治化(politicization)시킨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는 과정에서 「共産主義의 朝鮮化」(Koreanization of Communism)는 아이러니칼하게도 서서히 진행되고 있었다.

---

63) 이를 '파라독스의 전략'(strategy of paradox)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즉 전통정치문화적 특성을 단절시키려고 노력하면서도 대중들의 전통적 정치정향인 묵종(submission)성향을 통치에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Hakjong Yoo, "The Two Koreas: A Comparative Political Analysis of a Divided Nation," (Unpublished Ph.D. Thesis, Department of Politics, New York University, 1977), pp.74-75.

호칭문제와 함께 고려할 사항은 통치차원에서 나타난 전통적 잠재의식의 「活用」국면이다. 새로운 사회건설에 맞게 전통과의 단절을 혁명적으로 시도하던 김일성도 잠재된 전통적 요소를 活用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예컨대, 가족관계를 유추하는 표현을 자주 사용함으로써 조직사회의 결속력을 향상시키려는 시도를 자주하고 있다.

> "병사들에게 군대는 집이나 다름없읍니다. 군관은 그들의 아버지며 형과 같습니다. 따라서 군관들은 자기 부하들을 친아들이나 친동생처럼 아끼고 돌봐주어야 합니다. 또한 병사들은 군관들을 형이나 아버지처럼 따르고 뭉쳐야 합니다." 64)

이는 가족관계를 유추해서 표현함으로써 군대의 규율과 사기를 유지하려는 예이다. 이처럼 조직내의 동지간 결속을 형제애적 차원으로 비유해서 협동심을 고취하려는 태도는 바로 천리마운동의 근본정신이다.

이런 유추표현방법은 대외관계인식과 주체민족주의인 자주자립을 내세울 때도 나타나고 있었는데, 1960년대 초에는 소련에 대해서 형제애를 나눈 구원자, 영원한 우애를 나눌 동지라는 표현을, 중국에 대해서는 혈맹으로 맺어진 형제 또는 서로 마음이 통하는 순치관계라는 표현을 함으로써 다분히 우방과의 관계를 家族關係에 비유해서 설명하곤 했다. 그러나 중소간의 갈등 속에서 여러 차례 표현의 정도를 달리하던 북한은 1966년 8월 12일 자립을 선언하고 나서는 중립적인 표현을 쓰려고 노력해온 반면, 미국과 일본은 살려둘 수 없는 적 또는 철천지 원수로, 남한의 지도자는 민족 반역자로 표현함으로써 증오의 감정을 불러 일으키는 방법을 사용해 왔다.

한편, 용비어천가에서 이성계의 6대조의 업적까지 거슬러 올라가 칭송하

64) 김일성, "인민군대를 친혈육과 같이," 천리마, 3 (1971. 3), p.109.

듯, 김일성의 아버지, 조부, 증조부의 업적 과시를 비롯하여 친인척의 활동을 역사화하고 출생지 및 생활터전을 사적지화하고 성역화하는 것도 다분히 權威의 正統性 근거를 마련하는 傳統的인 방식에 의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도는 1980년대 들어 실행된 30여 차례의 행정구역 개편 및 지명의 개칭사업에 잘 나타나고 있는데, 김정숙군, 김형직군, 김형권군, 김책시, 은덕군, 금빛동, 총성동, 구오동, 사오동, 십일리 등이 그 대표적 예이다.[65]

지금까지 살펴본 것을 정리하면, 우선 사회주의혁명을 통한 정치사회화 과정은 ① 사회구성원의 정향을 내향적이고 가족중심적인 성향에서 外向的이고 국가나 집단중심적으로 바꾸어 主體的 民族主義를 지향하게 만들었고, ② 전통적인 부자관계를 국가내의 지도자-인민관계로 바꾸되 그 성격은 부자관계의 기본을 유지하는 변형을 창출해 냈고, ③ 성취동기를 유발시킴으로써 귀속주의적 요소가 신분을 결정하던 기존의 사회인식을 전환시켰고, 아울러 과거의 수동적 인성을 적극적이고 能動的인 人性으로 전환시키는 데 성공했으며, 또한 육체노동을 하지 않으려고 공부하던 전통적 습성을 바꾸어 전 사회 구성원을 일하면서 투쟁하는 「붉은 벌」로 만드는 데 일단은 성공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위해 김일성을 비롯한 북한지도층은 ① 女性을 가정의 전통적 굴레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사회변동의 가장 큰 장애요인이던 가족구조를 무력화시켰으며, ② 국가가 개입하여 탁아소 및 유치원을 통해 어린이 人性改造作業에 힘썼고, ③ 농업협동화 작업을 통해 전통적인 사회구조를 약화시키면서 集團主義精神을 고양시켰고, ④ 사회구성원 모두 육체적인 일에 의무적으로 적극참여함으로써 계급이 없는 사회를 만들려고 노력해 왔던 것이다.

---

65)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북한의 지방행정』 (서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87), pp.62-73.

요컨대, 사회구조의 변화는 人性의 변화를 일으켜 새로운 경향을 갖도록 하는 데 성공을 했다고 볼 수 있다.

3. 전통의 지속측면에서 본 북한 정치문화의 특성

이상의 과정을 볼 때, 북한의 정치문화에는 북한정권 수립 이후의 歷史 및 북한 통치엘리뜨들의 統治哲學이 반영되어 있을 뿐 아니라, 북한정권수립 이전의 傳統의 영향이 잠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형성된 북한 정치문화의 특성은 무엇인가? 또한 이를 전통의 단절이 아니라 지속이란 측면에서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북한 정치체제는 원래 '가지지 않은 자들의 독재'라는 이른바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원칙을 수용하여 수립된 정치체제였다. 그러나 현재는 「김일성 왕국」, 「김일성 봉건왕조체제」, 「부자세습체제」 등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는 다수의 가지지 않은 자들로 시작된 「左」의 전제형태가 강한 자 그리고 우수한 자의 지배형태인 「右」의 專制形態로 바뀌고 말았다는 뜻이 된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서 북한의 首領論을 들 수 있는데 이는 플라톤의 哲人統治를 연상시킬만큼 수령의 절대적인 권한과 특출한 자질을 기초로 하여 체계화되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평가받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어떤 요소들이 작용을 하여 이와 같은 「전제적 권위주의」 정치문화를 형성하게 되었는가? 무엇보다도 이전에 형성된 傳統政治文化의 영향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조선조 전통사회의 사회작동원리인 삼강오륜의 예규에 따른 가부장적 전통, 전통적 중앙집권통치 경향 및 관료제 전통, 신분제에 따른 사회구조와 계급의식, 그리고 일제의 무단적 식민통치, 관존민비적 사고방식 등이 북한 정치문화의 특징인 專制的 權威主義를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의 경우는 공산화과정에서 전통적 봉건성을 씻

어내는 과도기로서의 혁명적 근대시민사회 단계를 거치지 못하고 바로 북한 공산주의사회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조선조의 정치사회구조가 일제식 민통치를 지나면서도 크게 바뀌지 않을 수 있었다. 그 결과, 1945년 해방 이후 북한 지도층이 물려 받은 북한 사회는 확실히 봉건적 전통성이 강하게 배인 사회일 수밖에 없었다. 다시 말해, 밑으로부터 시작된 市民革命을 거치지 않음으로써 중앙집권력이 강한 권위주의적 통치방식, 관료제의 경직성, 관존민비관념 등이 어느 정도까지는 그대로 잔존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또한 이런 역사적, 환경적 배경을 통치차원에서 적극 활용하여 사회주의혁명 수행과정에서 「전통」과의 무조건적 단절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전통의 영향력을 體制肯定的으로 「活用」한 김일성의 통치철학도 전제적 권위주의 성향을 정착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의 전제적 권위주의 문화를 형성한 또 하나의 요인으로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의 영향을 들 수 있다. 북한의 경우는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의 속성이 傳統의 封建性과 相乘的으로 결합하여 권위주의적 전제성향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낸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 특히 사회주의와 전제주의의 결합체라고 할 수 있는 레닌주의의 영향은 북한을 專制的인 통치형태로 만드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고 본다.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나타난 현재의 전제적 권위주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해석한다면 다음과 같다.[66] ① 심리적인 정향에서 볼 때, 북한에서는 仁의 가치가 義를 거의 흡수해 버린 양상을 띠고 있으며, ② 전통적인 부자관계, 부부관계, 형제관계의 행동유형은 아직까지 존재는 하지만 오직 가족문제에 국한되어 있으며, ③ 전통적인 군신관계는 부자관계로 변질된 양상을 띠고 있다. 또한 ④ 전통적인 형제관계는 동지

66) Thomas Hosuck Kang, 1979, 앞의 글, pp.102-103.

관계로, 부부관계는 남녀관계로 바뀌어 가고 있고, ⑤ 김일성에 대한 忠誠이 孝를 지배하고 있으며, ⑥ 전통적인 내향적 정향은 점차 외향적인 유대관계로 변해 가고 있다.

이상의 해석을 다시 말한다면, 북한 사회는 오직 仁으로 작동하는 사회라는 것이다. 즉, 단순하게 군신간의 義理에 의해 사회가 작동되는 것이 아니라 일인지배자와 인민의 관계가 군신관계를 초월한 父子關係로 변함으로써 義가 아닌 仁의 통치를 행하고 있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어버이 수령의 자애로운 은덕으로 덕치를 행하는 사회」로 변질되었다는 의미이다.

결국, 북한에서는 조선조 사회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던 부자관계에서의 孝와 일본사회에서 중시하던 군신관계의 忠이라는 개념이 결합된 「父子關係에서의 忠」이라는 새로운 유형이 만들어진 양상을 띠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유교사회의 핵심인 五倫 가운데서 모든 인간관계의 주축을 이루던 실질적인 부자관계를 사회주의 건설과정에서 약화시켜 나감과 동시에, 이전에 상대적으로 약했던 군신관계를 사회주의 건설과정에서 강화시킴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지배형태가 창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요컨대, 새로운 사회구조에 전통적인 부자관계가 투사되어 새로운 군신관계가 만들어짐으로써 마치 거대한 家族國家(family-state)를 출현시킨 것이다.

따라서 관점을 전통의 지속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북한의 새로운 사회구조는 여전히 조선조 때부터 내려오는 유교적 내용을 완전히 탈피하지 못한 채, 또한 부분적으로는 일본통치하의 영향을 벗어나지 못한 채 작동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전통사회의 기본적인 작동원리였던 전통적인 부자관계가 아버지같은 지배자에 대해 충성을 다하는 것으로 대치되었고, 형제관계는 사회조직내에서 조직원끼리 동지관계의식을 유지하는 것으로 대치되었을 뿐 아니라, 「家」중심적인 내면적 성향이 집단중심적인 외향적 성향으로 전환되어, 조선 사회를 유지하던 유교적 원리와는 많은 점에

서 혁명적 변화를 보이고 있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父子槪念이 투영된 수령과 인민의 관계설정, 모든 인민을 兄弟關係로 보는 혁명적 혈연관계 강조, 그리고 「人民의 戶主」[67]인 수령님을 모시고 함께 잘 사는 大家庭을 이루려는 북한 통치엘리뜨들과 인민들의 의식 속에[68] 전통적인 요소가 하나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 또한 부인할 수 없다. 비록 전통을 해석하거나 운영하는 면에서 이전 사회와 다른 양상을 보일지라도 전통의 영역을 쉽게 벗어날 수 없음을 북한통치자나 통치를 받는 대다수 인민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전통의 영역을 기준으로 할 때 근본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즉, 파괴와 건설은 사회주의적이었으나 작동원리는 아직도 전통적인 영역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채, 공산주의가 토착화될수록 전통적인 문화인자는 점점 더 현재화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또 하나의 북한 정치문화의 특징으로서 통치이데올로기에 의해 창출되는 統治文化로서의 敎條性이 강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는 국가와 사회를 지도하는 공식이데올로기를 절대시하며, 이데올로기의 적용과 실천에 현실적 융통성을 좀처럼 인정하지 않으려는 정치체제에 대한 인지적 태도와 정향을 의미하는 데, 북한 정치문화가 이런 마르크스-레닌주의에 기초한 전체주의적 특성을 강하게 지니게 된 원인은 무엇보다도 북한정권의 出現過程과 관련이 깊다고 본다. 즉, 토착세력에 의한 혁명을 거치지 않고 소련의 적극적인 후원 아래 창출된 타율적인 정권수립이었기에 권력의 정통성부분에서 상대적인 弱點이 있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더 이념적으로 순수성을 고수하려고 했던 역사적 사실에 기인한다고 본다. 게다가 「主體」의 제기과정이 안고 있는 「주체」제기의 절박한 必要

67) 사회과학출판사, 『령도체계』 (평양:사회과학출판사, 1985;서울: 지평, 1989), p.147.
68) 조광동, 『더디가도 사람생각 하지요』 (서울: 지리산, 1991), p.34.

性이 정통성의 순수함을 고집하려는 성향을 더욱 강화시켰다고 할 수 있으며, 분단상황이라는 特殊性이 이를 유지하는데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즉 위기적 안보상황의 대처를 위해 이념적인 공고화를 내세우면서 체제의 통합, 동원, 합리화 기능을 강화해 온 데 기인하는 것이다.

이런 전체주의적 특성과 관련된 특성으로 당 엘리뜨중심의 官僚主義的 性向을 들 수 있는 데, 『김일성 저작집』 여러 곳에 걸쳐 官僚主義의 弊害에 대해 비판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만큼 북한체제 내에 관료주의적 성향이 만연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북한 관료주의적 정치문화가 갖는 독특한 특성은 「同調過剩」(over conformity)現象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규범준수의 강조를 마치 규범을 절대적인 것처럼 받드는 데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즉, 당방침이나 金日成 敎示, 金正日 指示를 신봉하는 데서 나오는 것으로서, 이를 준수하는 것만이 충성을 다하는 것이라는 심리가 작용하여 규범 속에서 자기를 방위하려는 防禦機制가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69] 요컨대, 手段으로 간주되었던 규칙, 규범, 지시 등에 대한 준수가 충성을 통한 정책관철이라는 목적으로 轉換되는 양상을 말한다.

관료들 뿐 아니라 북한주민들에게도 그동안의 꾸준한 정치사회화의 결과, 김일성을 권력의 상징 또는 그 정상의 인물로 이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북한사회」자체가 마치 그에 역사되는 것이 필연적이라고 할만큼 그에 대한 同調過剩現象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본다.[70] 예컨대, 대부분의 주민들은 主體思想의 추종자로서, 그리고 당의 충실한 일꾼이 되기를 바라고 있으며, 服從的인 參與로서 각자의 역할에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다고

69) Yoo Ki-Hong, "A Study of North Korean Communist As Related to the Rise of Kim Il-Song" (unpublished Ph. D. thesis, The American University, 1969), pp.183-185; 박완신, 『北韓行政論: 官僚體制와 行政行態』 (서울: 회성출판사, 1988), p.252에서 재인용.

70) 조광동, 『더디가도 사람생각 하지요』 (서울: 지리산, 1991), pp.34-36, 71-74, 79-84; 안드레이 란코프, 『평양의 지붕 밑: 소련 레닌그라드대 란코프교수의 북한생활체험기』 (서울: 연합통신, 1991), pp.56-58, 61-64.

본다. 또한 북한주민들은 최소한의 자존적 방어를 위한 사회적 필요를 무엇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잘 깨닫고 있으리라고 짐작된다. 따라서, 간혹 당교리 내지는 정책이 그들의 태도와 신념에 일치되지 않을지라도 항의없는 피동적인 참여로서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71] 그 결과 북한의 정치문화에는 중앙집권화된 정치체제 아래 이른바 「동원문화」가 생성되어 있다고 본다.

세번째로, 북한 정치문화의 집단주의적 특성을 들 수 있다. 이는 북한체제에서의 규범문화 및 생활문화가 「집단주의」정신 및 원칙에 의해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북한에서는 「集團主義」를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생활의 기초이며 공산주의자들의 활동원칙"[72]으로 규정하고, 집단주의 정신과 원칙을 정치교양 및 혁명 2세 교육의 가장 중요한 덕목의 하나로 강조해 왔는데, 이러한 집단주의 정신과 원칙은 '조선로동당 규약'에 나타난 바람직한 黨員像의 기준으로, '농업노동자동맹' 규약에 나타난 바람직한 農民像·勞動者像의 기준으로, 그리고 '사회주의 노동청년동맹'규약에 나타난 바람직한 靑年·學生像의 기준으로서 적용되고 있다.[73] 한마디로 이 원칙은 각종 組織生活을 포함한 북한주민들의 모든 사회생활 규범의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고, 이 기준에 의해 모든 사회생활이 유지·운영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집단주의적 특성은 북한을 방문한 사람들이나 거주했던 사람들에 의해 가장 많이 지적되는 북한의 규범문화적 특색이며, 북한소설에서 나오는 주인공들의 성격을 결정짓는 중요한 잣대가 되고 있다. 북한 방문기와 소설

71) 김현희, 『이제 여자가 되고 싶어요』(제2부) (서울: 고려원, 1991), pp.60-96.
72) 김일성,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 (1977년 9월 5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한 연설) 『김일성 저작집』, 제32권 (1977. 1 - 1977. 1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6), .385.
73) 각종 규약상의 내용분석은 이상두, "북한의 정치교육에 관한 연구," 『남북한의 이데올로기와 정치』 (서울: 거목, 1986), pp.127-133 참조.

내용 등에 나타나고 있는 集團主義的 規範의 기본적 특성으로 첫째, 집단 이익의 절대중시성향, 둘째, 노동애호정신의 강조, 셋째, 조직문화의 활성화, 넷째, 토론문화와 회의문화의 정착, 다섯째, 유일사상체계 확립에 대한 강조 등을 들 수 있다.

이외에도 집단주의적 규범과 관련되어 북한 정치문화의 특성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서 정신 및 물질생활에 있어서 청교도적인 가치와 관행을 따르려는 일종의 禁慾主義的인 성향과,[74]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에 대한 자부심과 革命的 樂觀主義[75] 속에 나타나는 자부심 등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체제긍정적인 규범문화적 특성의 이면에 집단주의적 규범을 회피하는 성향과 함께 사회일탈적인 가치와 행위들이 공존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예컨대, ① 集團利己主義, ② '자유주의 한다'라고 표현되는 集團行動回避 성향, ③ '고선생', '뒷문치기' 등으로 표현되는 賂物授受行爲, ④ 절도, 직권남용, 태업, 성범죄 등의 社會的 逸脫行爲, ⑤ 그리고 폐쇄된 사회에서 겪는 고립감과 외부세계에 대한 동경 및 不安 등이 방문기나 귀순자의 수기 및 면담 등에서 지적되고 있다.[76]

이는 북한 통치엘리뜨들이 원하는 기대문화 내지는 지배문화의 범주에는 속하지 않지만, 이러한 성향 또한 주체사상에 의한 정치문화를 형성해

---

74) 강정인, "북한사회의 평등성: 북한체제의 개혁, 개방 전망과 관련하여," 『동아연구』, 제24집(1992, 6), pp.126-127; 유재천, "북한사회의 변화전망," 『동아연구』, 제23집 (1991, 12), pp.150-151; 조광동, 1991, 앞의 책, pp.36-38; 안드레이 란코프, 1991, 앞의 책, pp.181-182, 이온죽, "북한사회의 가치지향과 인간관계 특성," 『북한사회연구』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8), p.276.

75) 윤미량, "북한사회와 아동문학," 국토통일원, 『문예작품을 통해 본 북한사회』 (서울: 국토통일원, 1989), pp.152-156, 160-162; 조광동, 1991, 앞의 책, pp.30-36; 안드레이 란코프, 1991, 앞의 책, pp.115-119; 임채욱, 『서울문화 평양문화』 (서울: 신원문화사, 1989), pp.155-156, 172-174.

76) 국토통일원, 『귀순자의 증언을 통해 본 북한체제변화 실태연구』 (서울: 국토통일원, 1989); 국가안전기획부, 『북한주민의식조사연구: 월남 귀순자 진술을 중심으로』 (1990); 귀순 유학생 장영철과의 인터뷰 (1991. 10. 24); 귀순 외교관 고영환과의 인터뷰 (1991. 10. 26).

가는 과정에서 안게 된 特性이라는 점에서 소홀히 할 수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사회주의체제 붕괴이후 소련이나 동구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에서 보았듯이, 이러한 특성들은 공식적인 기대문화 내지는 지배문화를 주도하고 있는 통치이데올로기의 위상변화에 따라 얼마든지 현재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북한 정치문화의 민족주의적 특성을 들 수 있다. 민족주의적 특성은 주체사상의 「主體」개념을 제기하면서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지만, 傳統政治文化의 관점에서 보면 민족주의적 정향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왜냐하면 한민족의 역사적 배경을 볼 때 외침에 대한 끈질긴 항쟁, 인접한 강대세력들 사이에서의 민족적 자주국가로서의 존속과 발전, 고유한 민족적 문화전통의 보존, 일제 식민통치하에서의 민족독립운동 등의 민족주의적 정향이 전통정치문화의 하나의 대표적인 속성으로 지속되어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체사상에서 제기한 「주체」개념은 마르크스-레닌주의 관점에서는 이질적인 것이었는지는 몰라도, 傳統文化的 관점에서는 매우 친숙한 개념이었으며, 일제식민경험을 겪은 북한 주민들에게는 민족적 자긍심을 심어주는 개념이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북한정치문화의 민족주의적 성격은 「주체」를 제기할 수밖에 없었던 북한 통치엘리뜨의 정치적 필요성과 전통적인 민족주의적 정향이 서로 결합하여, 「주체」에 입각한 정치사상교육을 시작한 1956년부터 지금까지 북한체제를 작동시키는 중요한 정치문화적 요소로서 자리잡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를 기본 이념으로 하는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에 있어서 民族主義는 원칙적으로 적대시되어 왔기 때문에, 최근들어 북한이 민족주의에 대해 전환적 자세를 나타내기 전까지는[77] 민족공산주

77) 사회주의권의 붕괴에 즈음하여 북한에서는 '부르조아 민족주의'와 '참다운 민족주의'를 구분하려는 시도를 함으로써 한계를 드러낸 사회주의라는 말 대신에

의 개념마저도 수용하지 않고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노선을 천명해 오면서 민족주의를 否定的으로 해석해 왔다. 이런 연유로 북한에서는 민족과 민족운동, 민족문제와 민족주의를 엄격하게 분리해 사용해 왔는데, 민족과 민족운동, 그리고 민족문제 등은 그 가치를 肯定해온 데 반해 民族主義에 대해서는 "계급적 이익을 전민족적으로 가장하는 부르조아의 사상"이라고 하며 매우 否定的으로 평가해 왔다. 대신 「사회주의적 애국주의」라는 용어를 써왔다. 그러면서도 자주성, 민족의식, 민족적 자부심, 민족적 대단결, 사대주의 반대, 자력갱생, 민족적 자주의식 등 다분히 民族主義的인 성향을 인민들에게 요구하면서 주체사상을 표출시키고 지도이념화해 왔다.

이러한 이중적인 태도에 대해 여러 가지 원인을 생각할 수 있으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민족주의적 성향이 북한의 정치문화로서 이미 사회 전반에 걸쳐 잠재하고 있는 현실을 무시하지 않고 이를 「活用」하려는 데서 기인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즉 북한정권이 체제를 통합, 동원,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통치수단으로서 북한사회에 전통적 정치문화로 뿌리를 박고 있는 民族主義的 性向에 편승, 자극하는 방법을 선택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지정학적 요인으로 인해 일찍이 민족의식내에 잠재해 있던 성향, 그리고 한국동란으로 형성된 북한주민들의 반미의식을 자극하여 잠재의식의 현재화 및 정치화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런 북한에서의 민족주의적 성향과 관련하여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은 정치문화가 순수 민족주의적 입장에서가 아니라 김일성 개인숭배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민족주의적 성향이 북한 정치문화의 내용적 특성을 이루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것을 종국적으로 個人 偶像化를 목적으로 북한 통치엘리뜨들이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결

민족주의를 앞세우고 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의 민족주의는 사회주의의 대용물이라고 볼 수 있다. "나는 공산주의자인 동시에 민족주의자이고 국제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라고 연설한 김일성의 「우리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자」에 이러한 입장이 잘 나타나고 있다. 『로동신문』, 1991년 8월 5일 참조.

국 민족적 자부심의 근거는 김일성에게 있는 것이고 김일성의 「혁명전통」에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북한 정치문화의 민족주의적 특성에는 흔히 말하는 민족의식, 민족문제, 그리고 민족주의의 내용과는 질적으로 다른 오히려 쇼비니즘적인 성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겠다.

이상에서 북한의 정치문화에 내재되어 있는 특성들을 검토해 보았다. 그런데 북한 정치문화의 특성들이 모두 복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 어떤 원인과 요소에 의해 형성되었는지를 정확히 규명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예컨대, 集團主義的 特性에는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요소 외에 전통문화적인 요소의 영향도 포함되어 있고, 專制的 權威主義 특성에는 전통정치문화적인 요소 외에 레닌주의적인 요소가 반영되어 있으며, 또한 인과관계로 설명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북한의 官僚主義的 特性과 조선조나 일본통치하의 관료주의적 특성을 별개의 것으로 보기에는 상당한 유사점을 서로 가지고 있어, 어느 한 요인으로 특성의 원인을 설명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전통정치문화가 북한의 정치문화의 특성을 낳는데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다. 특히 북한이 「봉건왕조체제」 내지는 「김일성 왕국」으로 불리워지게 된 데에는 전통정치문화라는 요소가 결정적으로 작용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북한의 정치문화에 내포된 전통정치문화적 요소는 支配者-被支配者의 權威關係와 權威의 移讓 측면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고 하겠다. 즉, 전통정치문화의 영향력은 수령체제를 유지하고 부자세습체제를 지탱하고 있는 데서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전통의 영향력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예컨대, 集團主義的 特性을 '품앗이'라든가 '향약', '소겨레' 등의 전통적인 협동정신이 반영된 결과로만 해석한다든가 官僚主義的 특성을 조선조의 중앙집권제하에서 소수 양반관료들이 배태한 관료적 행태와 연관시켜 단순하게 전통적인 역사문화적 유산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 북한에서의 「集團主義」가 가족이나 가

문에 국한된 전통의 「한정된 공동체 의식」을 극복하는 성격의 집단주의라는 점에서 이는 다분히 全體主義的이고 社會主義的인 특성이 반영된 것이라 하겠으며, 官僚主義的 성향 또한 역사상 전체주의 국가체제의 예외없는 특성이었다는 사실에서 「주체문화」의 관료주의적 특성을 인과관계적인 설명없이 단순하게 전통정치문화의 유산으로 보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하겠다. 民族主義的 特性 또한 조선조와 일제하의 정치문화적 특성에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던 民族主義的 性向을 자극하여 政治化시킨 결과이지만, 엄밀히 따진다면 이는 金日成 個人崇拜를 목적으로 하는 북한 특유의 「民族的 自負心」개념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민족주의 특성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Ⅳ. 政治文化的 觀點에서 본 北韓의 變化可能性

지금까지 북한 정치문화가 지니는 제특성을 「傳統」의 持續이란 측면과 관련시켜 고찰하였다. 그 결과, 사회주의국가들의 체제 보편성과 다른 북한체제의 特殊性은 바로 전통정치문화의 지속적인 영향력에서 기인함을 알 수 있었다. 즉, 북한정치체제의 특수성인 수령체제는 전통사회의 기본 작동원리였던 儒敎이데올로기에 의한 지배-피지배관계가 사회주의 건설과정에서도 크게 변하지 않고 반영된 결과, 마치 왕을 구심점으로 한 「倫理的 權威主義」에 의해 작동되던 조선조의 정치문화가 수령을 정점으로 한 이른바 「主體的 權威主義」로 계승되어 작동되고 있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이는 무엇보다 강하게 지속된 전통정치문화의 영향력이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지만, 아울러 통치엘리뜨들이 통치형태로서 사회주의의 보편적인 통치형태를 택하지 않고 굳이 傳統的인 權威關係를 택한 결과였던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북한 정치문화의 핵심은 「어버이 수령 김일성」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북한 사회에서 金日成은 마치 헤겔의 절대이성이 마르크스의 역사적 필연을 거쳐서 구상화된 것 같은 이미지를 지니면서 단순한 권위주의형 통치자가 아니라 「어버이」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權威關係」가 수령-당-인민중심의 체제조직원리에 반영되면서 권력이 사랑과 은혜로, 통제가 귀속감으로, 그리고 권력자의 욕구와 의지가 공권력으로 대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집단주의적 특성이 사회규범화되면서 물질적 측면과 정신적 측면에서의 禁慾主義 性向, 克己心, 自己 犧牲 등과 같은 정향이 사회 전반에 걸쳐 어느 정도 정착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정치문화가 문화로서 정착되고 또 체제작동원리로서의 역할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수행하느냐 하는 것은 모두 金日成 首領의 존재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이 북한 정치체제의 가장 큰 特徵이다. 즉 북한의 정치문화는 김일성이라는 문화 창출자에 의해 만들어진 統治文化 내지 觀念文化로서 출발하여 이를 인민대중에게 확산시키고 사회화하는 과정에서 정착된 정치문화인 것이다. 그러나 지금도 하나의 체계적인 문화체계를 갖추고 이를 인민의 의식구조에 내재화하기 위해 「3대혁명」을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통치자가 의도하는 정치문화를 만드는 작업이 결코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현재로서는 문화 창출자가 내세운 價値와 모순되는 집단이기주의, 집단행동회피, 뇌물수수행위, 절도·직권남용·태업·성범죄 등과 같은 社會的 逸脫行爲가 어느 정도 북한 사회에 형성되고 있는가를 실증적으로 정확히 확인할 길은 없다. 그러나 북한에서 「반혁명적 요소」 또는 「낡은 사상의 잔재」가 공개적으로 경계시되고 있고, 「김일성 교시의 학습기피」, 「당조직생활의 태만, 당정책방침의 철저이행 촉구」, 「청년인테리의 반사회주의적 행동」 등과 같은 體制否定的인 주제가 빈번히 지적되고 있는 것을 볼 때, 북한의 정치문화의 확산과 정착에 어려움이 많음을 짐작할 수 있다.

북한의 정치문화의 또 하나의 특징은 「閉鎖文化」라는 점이다. 즉, 북한의 정치문화는 사회성원들의 이동의 자유와 대외정보접촉의 기회를 효율

적으로 통제하거나 차단한 데서 형성되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지상낙원이라는 이른바 「福土」觀念에 기초한 민족적 자부심은 閉鎖性이 보장되는 한도에서 그 의미를 유지할 수 있는 脆弱性과 限時性을 지니고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결국 북한의 정치문화가 체제작동원리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어버이 수령 金日成」이 존재해야 하며, 또한 지금까지 유지해 온 閉鎖性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요컨대, 김일성의 존재와 폐쇄성 유지는 북한의 정치문화가 북한 정치체제를 작동시키는 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조건인 것이다. 따라서 만약 김일성이 사망하거나 불가피한 이유로 폐쇄체제를 개방하게 될 때 북한의 정치문화는 체제작동원리로서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컨대, 김일성의 사망 이후 북한이 처한 경제문제를 크게 개선하지 못할 경우 김일성시대와 김정일시대의 비교에서 오는 인민들의 心理的인 相對的 剝奪感이 정치적 불만으로 화할 소지가 클 뿐 아니라, 또한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편으로 실용주의적 개방정책을 수용하게 될 때 유입된 外部의 정보 및 자본주의 바람이 북한 사회내의 물질적 유인 동기 및 업적주의를 크게 증폭시킬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이러한 상황에서는 북한의 정치문화가 그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상황적 요인이 북한의 정치문화의 文化變動要因으로 작용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만약 김일성의 통치기간이 좀 더 연장되고 폐쇄체제의 개방화를 효율적으로 지연시켜 북한 정치문화의 變動要因을 통제할 수 있다면, 그동안 정착시켜 온 정치문화는 그 기능을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으리라고 예상된다. 특히, 정치문화의 專制的 權威主義 특성이 외래적인 것이 아니라 성원들에게 이미 오래전부터 익숙한 정향이며, 또한 이를 통치차원에서 잘 活用한 결과 전통적인 충성의 양식과 복종의 양식이 크게 변질되지 않은 채 잘 유지되어 왔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현재 진행 중인 북한의 父子世襲體制가 定着할 가능성도 높다.

물론 공산화 이전의 지주나 권력층의 착취를 직접 경험해 보지 않은 새로운 세대를 의식화시켜야 하는 정치교양사업의 어려움도 안고 있고, 또한 쿠데타와 같이 상황을 급진전시킬 돌발변수도 항상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혁명 이후 태어난 세대인 진정한 「北韓人」이 전체 인구의 80%를 넘고 있고, 이들의 대부분이 국가 주도의 정치사회화 과정을 겪은 정형화된 인간형으로서 정치문제에 관한 한 어떤 반대도 허용하지 않는 분위기 속에서 자라나 절대적 충성과 자발적 복종이 생활화된 사람들이란 점을 고려할 때, 수령의 대를 이을 후계자가 자질면에서만 정통성을 갖춘다면 그 후계자에 의한 통치는 충분히 수용될 가능성이 있다.

한마디로 말해 臣民型의 정치문화를 담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문화적 특성에 맞는 지도자 변경방식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정치현상일 뿐, 사실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대단한 일이 아닐지도 모른다. 조선조, 일제 때는 물론 해방 이후 지금까지 통치자를 인민의 뜻에 따라 선출해 본 경험이 한번도 없는 「북한인」들에게는 지도자를 선택한다는 정치적 행위 자체가 오히려 「非傳統的이고 낯설은」 행위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또한 북한의 권력엘리뜨의 성분이 매우 동질적이며 이미 既得權의 이익을 향유하고 있는 「노멘클라투라」(NOMENKLATURA)들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권력엘리뜨 내에서도 金正日 집권에 대한 抵抗이 오히려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김일성 사후 궁정쿠데타의 가능성도 예상할 수 있지만, 이는 현상황에서 쿠데타에 대한 道德的 正當性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뿐 아니라, 대를 이어 충성함으로써 확보되는 이익이 쿠데타의 위험도보다는 낫다는 계산에서 선불리 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부자세습에 대한 불만과 반대의견이 존재하더라도 이를 직접 표출시킴으로써 자진해서 「충대를 매기보다는」 참고 누군가 그렇게 해주기를 기다리는 심리가 한동안 지배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할 때, 이러한 정치문화적인 관점에서의 현상유지 또는 체제유지적인 예측은 모두 金日成의 통치기간의 延長과 북한사회의 閉鎖性을 필수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그 예측이 실현될 가능성은 높지 않

다. 왜냐하면 두 가지 조건 모두 현재 북한이 처한 상황을 볼 때, 충족될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절대권력자의 자연적 수명의 한계와 폐쇄체제 유지의 한계는 「우리식 사회주의」체제를 작동시켜 온 주체사상에 의한 정치문화 즉, 「主體文化」의 변질을 초래하는 결정적인 문화변동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화변동요인으로 인해 「主體文化」가 단시일내에 소멸되거나 그 영향력이 단절될 것이라는 단정을 성급히 내릴 수는 없다. 왜냐하면 「主體文化」가 그 동안 하나의 문화로서 정착될 시간과 조건을 어느 정도 갖추어 왔을 뿐 아니라 체제작동 원리로서 그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해 왔음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일성의 사망, 개방, 쿠데타 및 경제침체와 같은 文化 外的인 要素로 말미암아 김일성-김정일 중심의 主體體制가 무너진다 해서 「主體文化」의 특성을 배제한 새로운 정치체제가 출현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